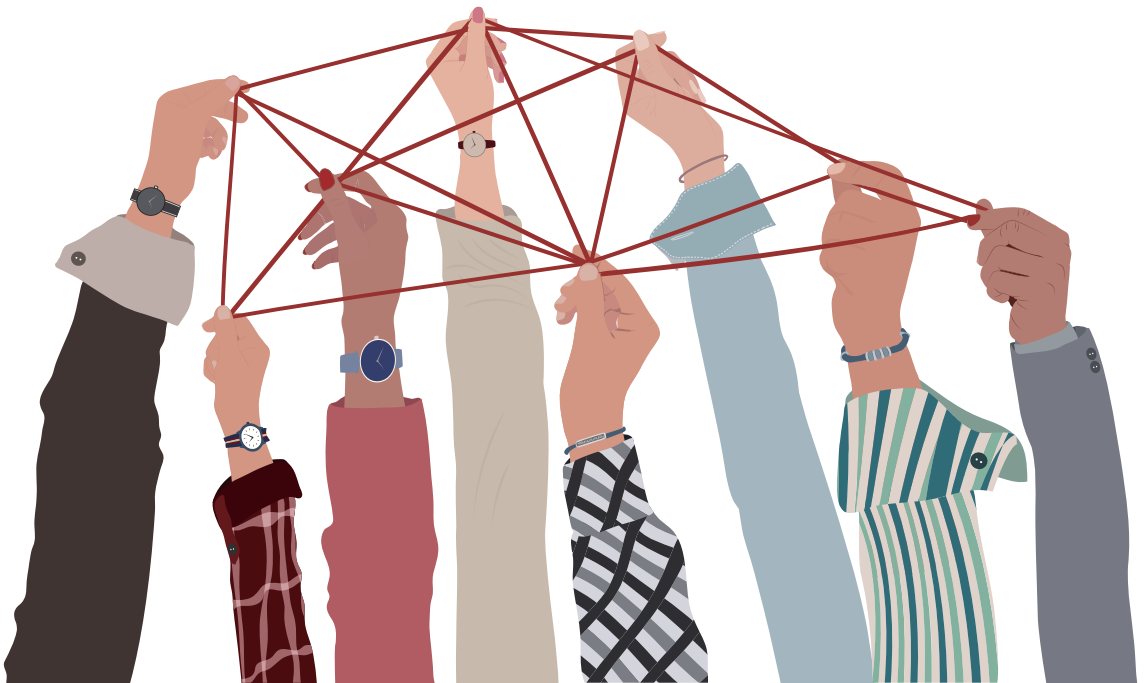


공공 사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야기

VOL. **02**
2022



CONTENTS

인사말	04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소개	06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회 소개	10
• 공공기관 협의회 연혁	
• 공공기관 협의회 멤버기관 소개	
공공기관 ESG 사례 탐구	20
• LH	
• 한국환경공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무 간담회	24
ESG 사회적 가치 Q&A	28
[기획특집] 새 정부 ESG 정책방향	42
[글로벌 리뷰]	46
• ESG 경영 4대 트렌드	
• 지속가능보고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 Double Materiality	
사기업 우수사례로 보는 공공기관 ESG 경영 적용	54
• SK텔레콤	
[칼럼] 공공기관의 ESG 경영	66
연구원 기타 발행물	70
CSES 발간자료	72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Social Value Hub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 www.cses.re.kr
기획·집필 정아름 팀장(사회적가치연구원)
김현정 선임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오유림 선임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도움 박소영 Research Assistant(사회적가치연구원)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인사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야기 '공공사이 2호'를 발간하며...

가을을 수놓은 단풍이 떨어지고 양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에 겨울이 왔음을 느낍니다. 다사다난한 2022년도 올해의 마지막 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회의 일환으로 출발한 간행지 '공공사이(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이야기)' 창간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러한 관심과 참여로 2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사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ESG 사례, 시의성 있는 이슈를 바탕으로 한 국제동향,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민간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당국 및 전문가의 고견을 더하여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공사이 2호'에서는 역할 및 책임에서 민간기업과 차이점을 가지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ESG 경영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바다 전체를 훑어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공기관의 ESG 경영 전략을 동일하게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
'공공사이'는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우리 모두의 가치를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CSEES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역시 동일하게 대응하기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 CSEES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협의회를 통하여 많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 및 전략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CSEES는 각 공공기관의 시그니처 사업을 모색하고 자체적으로 ESG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추상적 담론에서 벗어나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ESG 사례, 전문가 의견을 준비 하였습니다.

'공공사이'는 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CSEES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으며, 우리 모두의 가치를 위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이'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알맞는 ESG 역량과 지식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는 Hub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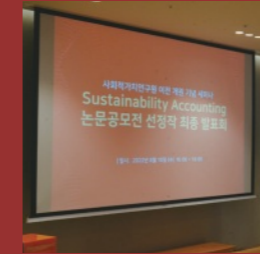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연구원장

나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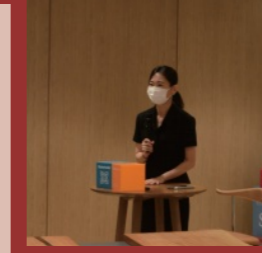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연구원

**측정과 인센티브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



Social Value



지식과 사람을 연결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Social Value, 그 주축에 우리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이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K에서 설립한 비영리 연구재단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덕분에 2018년 설립 이래로 꾸준한 연구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p>VISION</p>	 <p>MISSION</p>	 <p>주요사업</p>
<p>CSES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이를 함께 할 사람들을 연결하고 확장합니다.</p>	<p>지식과 사람을 연결하여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SOCIAL VALUE HU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성과 측정 • 사회성과인센티브(SPC) • 학술연구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성과 측정



사회 구성원들 간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영리, 비영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조직 활동의 결과로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한 '사회성과'를 측정합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SPC: Social Progress Credit



사회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발한 Social Progress Credit(이하 'SPC')는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거래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임팩트의 가치를 인식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PC를 설계하고 모집, 측정, 기업 관리 등 성과 측정부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리드합니다. 2022년 기준 지난 6년 간 창출한 누적 사회성과는 총 3,275억 원이고, 참여한 기업들에게 527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학술 연구



국내외 학자들, 현장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 사회문제, 사회혁신 등에 깊이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이론 중심의 학술적 지식을 넘어 '실천적 지식'을 창출합니다.

2022년 활동



2022년 CSES는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측정을 매개로 이해관계자 확대, 교육/학술 프로그램 성과 공유, SV 인재양성과 교육 확산, 다양한 구독층을 위한 서비스, CSES 시그니처 서베이, SV 측정 사례 및 지표 활용 유도 등 BIG 30 핵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측정 업무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산했고, 사회적 가치 관련 연구 데이터 측정 및 연구자 네트워크를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총 404개의 SPC 기업이 사업에 참여했고, 1,447명의 연구자가 DB에 등재되었습니다. 고객사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73여 개의 협력 기관, 10,251명의 온라인 구독자, 그리고 928편 이상의 온라인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성과는 873억, 인센티브는 71억을 창출하였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전



2022년 8월, 사회적가치연구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8층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전을 기념하여 '이전개원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CSES가 2023년 3월 새롭게 시행한 'Sustainability Accounting' 논문공모전의 선정작을 발표하였습니다.

CSES 이전개원 기념 세미나
: 'Sustainability Accounting' 논문공모전 선정작 최종발표회
2022. 8. 10.(수), 16 ~ 18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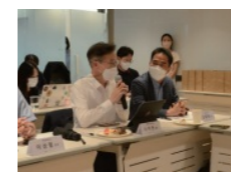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논문제목 및 연구자

발표1 지속적 공급망관리를위한 공급자 관련 ESG 공시 개선방안 연구	전홍민*(성신여대) 송학준(California State Univ.)
발표2 최고경영자 보상 구조상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 사용의 결정요인 및 효과 - 미국 S&P500 회사를 중심으로 -	현정훈* (NEOMA Business School)
발표3 기후변화위험에 따른 기업의 자원조정 의사결정	정태진*(IE Univ.) 최세라(한국방송통신대), 박소희(서울대)

자유토론 강평경(서강대), 김종현(한양대), 이상열(한양대), 선우희연(세종대), 이창섭(세종대)

* 발표자



공공기관 협의회 연혁 HISTORY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회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된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모임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및 기준을 논의하고, 공통된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 공공기관 협의회 멤버기관 가입 문의 ✉ yurim@cses.re.kr



2018
3월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력
▶ 1:1 MOU를 통한 화폐단위 측정 확산 및 측정 지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회 출범

- ▶ 공공기관 17개, 자문교수 25인으로 출범
- ▶ 협의회 출범배경, 필요성, 운영방식 소개

2018
12.13.

2019
1.25.

1차 실무자 회의
▶ DBL 사회성과 측정 방법론 소개
▶ 사회성과 측정사례 발표(LH)
▶ 사회적 가치 측정 관련 주요 이슈 공유



2019
3.29.

2차 실무자 회의
▶ 사회성과 측정사례 발표(SK 하이닉스)
▶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 및 측정 사례 공유



2019
5.17.

3차 실무자 회의
▶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관련 공통 지표 공유
▶ 관련 측정 이슈에 대한 그룹별 토의



2019
10.11.

4차 실무자 회의
▶ SK DBL 측정방법 소개
▶ 사회적 가치 측정사례 발표(SK E&S, 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가치 주제별 측정 이슈 공유



2019
12.5.

Networking Dinner



2019
12.6.

**5차 실무자 회의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세션 주관)**

- ▶ 사회적 가치 측정사례 발표(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 ▶ 글로벌 사회적 가치 측정 트렌드 공유



2020
3.~12.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 중심 사회적 가치 측정연구

- ▶ 사회적가치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연구
- ▶ 공공기관과 경영평가위원 모두 객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참고지표 제시
- ▶ 전체 공공기관 대상 공공기관 측정 현황 설문 실시

2020
7.3.

제 1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



▶ 영상 보러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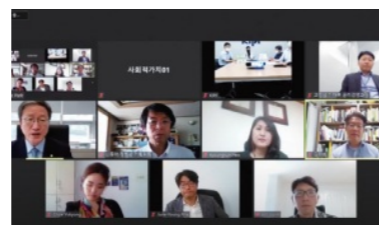


2020
8.24.

제 2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



▶ 영상 보러가기



2021
3.19.

제 3차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정책 토론회



▶ 영상 보러가기



2021
11.23.

공공기관을 위한 ESG경영전략 세미나



▶ 영상 보러가기



2022
1.10.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측정 협의회 개편

- ▶ Closed membership으로 운영 변경

2022
4.1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세미나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세션 동시개최)**



▶ 영상 보러가기



2022
8.11.

공공기관 협의회 제1차 실무간담회 온라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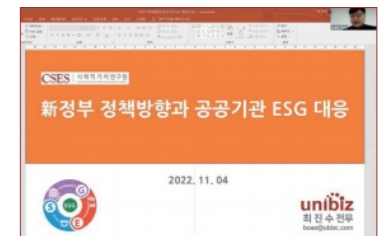
- ▶ Double Bottom Line SK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소개
- ▶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 방안 및 사례



2022
11.4.

공공기관 협의회 제2차 실무간담회 온라인 개최

- ▶ 新정부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ESG 대응





공공기관 협의회 멤버기관 소개

공공기관의 공통된 사회적 가치 및 ESG에 대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연구하고 논의하는 네트워크 장의 역할을 함께 한 9개 기관을 소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하였으며,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ESG 추진단(사장직속): ESG 경영 전략수립 및 실행 총괄
- ESG 소위원회(이사회 내): 세부추진 과제 검토 및 의사결정

▣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환경(E) △수소 및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 △공원녹지 탄소상쇄사업, △제로에너지 주택 사업,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단지 착공, △노후화된 임대주택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CDM 사업, △에너지경영시스템(ISO 50001) 인증 등 추진
- 사회(S) △주거복지로드맵('18~'22년) 달성을 위한 주택공급 이행,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2.0, △주거·사회서비스 통합지원(주거복지 플랫폼), △긴급 주거지원 및 국가유공자 특화주택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안전 강화, △협력사 ESG 지원 활동 등 추진

- 지배구조(G) △준법감시관 신설,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추진, △공정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공익법인입니다. 핵심사업인 공제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자산운용, 지방재정·회계의 선진화 및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광역센터 운영으로 회원인 자치단체를 현장에서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등 전국적인 조직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혁신본부 기획조정실(사회공헌)

▣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지역사회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사회공헌 및 광고홍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익광고와 옥외광고를 활용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 △'찾아가는 어린이 안

전체협교실' 운영 지원으로 지역 안전 강화, △지역자치단체의 유휴지를 활용한 도심 숲, <지방재정의 숲> 운영, △'마을기업의 재도약'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지역 거리에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진행



한국환경공단은 한국환경공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2010년 1월 한국환경자연

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의 기관통합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한국환경공단 K-eco연구원
- 경영기획본부 ESG경영처
- 사회가치·혁신 위원회 하에 여섯 개의 분과와 시민참여 혁신단, 운영총괄반으로 구성된 사회가치·혁신 추진단이 존재합니다.

▣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환경(E) △폐기물 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신속체계 지원, △사업장 대기 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굴뚝원격 감시체계(CleanSYS)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IT를 기반으로 노후차 운행제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망 연계 통합관제센터' 운영 △매년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순환이용 현황 조사 등 폐기물·재활용 분야 전과정 업무를 통해 국가 자원 순환 촉진에 기여
- 사회(S) △국내외 환경전문가 양성 및 양성 기관 설립,

△아이스팩 재사용 확산을 위한 지속가능 모델을 개발하여 운영. 재사용 모델 개발,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 60톤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매표·소각·아이스팩 구매비용 1.1억 원 절감과 함께 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마을기업 '어울림마을공동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 확대 실시

- 지배구조(G) △하도급 거래문화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부서의 신설, 기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SHA-MS(2020) 및 ISO45001(2019)을 취득하며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구축



한국중부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

하고 있는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기업입니다. 2001년 4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창립된 이후로 보령화력본부를 비롯한 6개의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설비용량 10,755MW로 국내 전력공급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에너지 리더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발전사업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사업 선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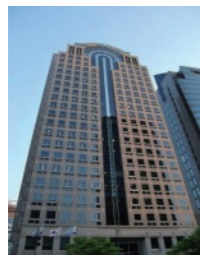
- 이사회 산하 비상임이사와 ESG전문가로 구성된 ESG 위원회가 ESG경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통해 ESG경영을 위한 실현 과제 발굴 및 실적 관리 등 전략체계를 실행하고 확산 및 환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CEO 직속 ESG경영처를 신설하여 ESG경영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유형별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활발한 의견 수렴과 반응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 **환경(E)** △국내 최초 풍력 이용 P2G 그린수소 생산 및 세계 최대 블루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등 수소신사업을 통한 에너지 전환 △대기 원단위 배출량 최저 2년 연속 발전사 1위 달성, △발전소 건설로 인해 매립된 서천 동백정 해수욕장의 연안 생태복원 추진
- ▶ **사회(S)** △고질적 산업재해의 원인인 빨리빨리 문화근절을 위한 KOMIPO-Turtle Culture(중부발전 거북이 운동) 시행, △2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 조성을 통해 ESG평가 인증 우수 중소기업 대상 대출 금리감면 지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및 동반성장 대통령 표창 수상('22. 11.)
- ▶ **지배구조(G)**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6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 △글로벌 수준 윤리·준법경영 확립으로 2022 윤리경영 대상 수상('22. 11.)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996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 담당부서

- ESG추진체계는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ESG추진위원회와 ESG경영추진단, ESG 분야별 추진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SG 과제를 수행하는 실행조직(담당부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환경(E)** 친환경 경영 추진반
- ▶ **사회(S)** 사회적가치 및 동반성장 추진반
- ▶ **지배구조(G)** 투명경영 추진반

■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꾸준한 관심과 노력으로 ESG 경영의 기반 조성**
ESG경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美 LACP Vision Awards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3년 연속 수상('18년 silver, '19~'20년 platinum), AI기반 ESG평가기관 지속가능발전소가 분석한 '21년 ESG평가에서 채권 발행 주요 공공기관 50개 중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획득하며 1위로 선정되는 등의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 ▶ **환경(E)** △K-RE100 참여 선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도입 이후 12년 연속 목표 달성 △업무용 임차차량을 100%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로 보유, △KDIC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22. 4. 선포식 개최)의 일환으로 사내 ECO마일리지 제도 도입, △임직원 기부물품으로 업사이클 제품 제작 및 기증 등 전사적 탄소배출 저감 노력
- ▶ **사회(S)** △가족친화기관 13년 연속 인증, △농협은행과 약정체결 및 지급결제 플랫폼 가입을 통해 '상생결제 시스템'을 구축('21년), △'20년부터 총 70개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을 선정하여 성장지원금을 후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하여 정보취약계층 및 화재취약계층에 양품화한 불용PC 및 가스자동차단기 등 기증('21년), △취약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재기지원 프로그램 제공,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 획득 및 유지('20년~)
- ▶ **지배구조(G)** △'21년 공사 최초로 여성 상임 이사를 선임하여 양성평등을 강화, △전사적 윤리경영 실행력

강화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윤리/인권 총괄조직인 '윤리경영팀'을 상설조직화('21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및 유지('20년~)



한국가스공사는 청정 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법에 의거 1983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요업무는 LNG 인수기지와 천연가스 공급배관망을 건설하고 해외에서 LNG를 수입하여 인수기지에서 재기화한 후 도시가스사와 발전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구현 및 지역균형 발전 공급망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1년 12월 기준 5,027km 전국 환상 배관망을 통해 215개 지자체에 보급을 94%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를 새로운 2030 비전으로 선포하고, 수소기업으로의 변화, LNG기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상생협력처 상생혁신기획부
-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한 ESG경영 선도**
- ▶ **환경(E)** △생물다양성·산림보전을 위한 Commitment 선언 △탄소중립(Net Zero) 시나리오 마련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21개 구축 운영 △LNG 냉열 활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탄소 감축 △삼척 월천 연안 유실해안 복원으로 주변 생태계 회복에 기여

- ▶ **사회(S)** △가스요금 경감 등 약 1조 7,050억 원 사회적 가치 창출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쪽방촌 5,045명 흑한·서기 계절나기 지원 △증평, 정읍 등 4개 지역 52천 가구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천연가스 공급성 강화 △30,750개소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 △협력업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컨설팅 제공, VR장비 지원 △중소기업 고용안정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지원, 시니어·미혼모 등 지역 사회적 약자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 지원
- ▶ **지배구조(G)** △ESG경영 기반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ESG위원회 및 ESG경영위원회 신설 및 운영 △반부패 청렴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TF 운영 △KOGAS 인권경영 로드맵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실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AI 탐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립 △신규 투자사업 심의 평가 위원으로 ESG 전문가 포함 및 ESG 평가 항목 신설



국립해양박물관은 2012년 개관 이래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방문하고 있는 글로벌 품격의 '해양문화공간'입니다. 해양문화를 바탕으로 해양역사, 해양과학, 해양생물, 해양산업 등 분야를 총망라 하면서, 해양강국으로서의 해운, 항만, 조선, 해양생물, 해양명명 등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21세기를 리드하는 세계적 수준의 해양종합박물관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 해양유물의 발굴,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및 국내외 네트워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총괄)
- 홍보전략팀(사회공헌)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ESG비전 : 바다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자연생태계 보전 선도기관
- 개관10주년 시 노사공동 ESG 경영선포

지난 7월 9일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내외 귀빈 및 임직원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가운데 '노사공동 ESG 경영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선포식에서는 ESG비전과 전략을 발표하고, 노사공동선언문 서약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ESG경영을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하였습니다.

- 환경(E)** △박물관공조기 지열시스템 설치 운영 △박물관지붕 태양광패널 설치 확대 추진 △전기자동차 충전소 4기 설치 운영 △해양쓰레기 사진전 개최 등 전시를 통한 환경보전 홍보사업 실시 △해양동물구조치료 사업으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치료 방류사업 실시 △동삼천 보호를 위한 임직원 플로깅 활동 연중 주기적 실시 △실내 고효율 LED조명 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 사회(S)** △해양클러스터 사회적가치 창출협의회 참여 △국월코리아 물품기부 캠페인 연중 주기적 참여 △장기환우 돌봄행사 실시 △취약가구 대상 주거정비활동 실시 △영도장애인복지관 대상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실시 △해양클러스터와 지역대학 연계 취업토크쇼 진행 △임직원 대상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 실시 △영도도시문화센터와 협업을 통한 지역민 대상 음악회 실시 △가족친화기업 인증(부산광역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 지배구조(G)**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운영 △국제적 박물관 윤리강령 준수 △이사회에 노조추천근로자 참관제 실시 △노사협의체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인천항을 현물출자 받아 2005년 7월 설립된 해양수산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입니다.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상임·비상임 임원이 동반 참여하는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최고 의사 결정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실행 및 관리를 위해 분과별 실무 위원회 및 ESG 워킹그룹, 외부 자문단, 참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윤리·감사업무를 이원화하기 위해 윤리경영팀을 신설하여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 및 관리하고 있으며 기존의 감사팀이 내부건제를 강화하여 윤리경영 전략 목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항만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 가치 창출**
2013년 국내 지속가능경영 대상 받은 것을 필두로 2016년에는 ESG 경영 평가를 시행하는 다운존스로부터 지속가능경영부문 아시아태평양 부문 3위(72점/100점)를 달성하는 쾌거를 발휘하였습니다.
- 환경(E)** △국내 최초 LNG 예선 건조 및 도입, △선박 내 산업폐기물의 재활용과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이클링 전문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자원순환경제를 구축, △정박한 선박에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공급하는 친환경 전력망을 구축
- 사회(S)** △항만물류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성, △중소기업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혁신제품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국내 항만공사 최초로 스마트 항만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 지배구조(G)** △비상임위원 중심의 이사회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디지털 안전망의 강화로 스마트 인천항을 구축



항만시설의 개발·유지·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부산항 개발 및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부산항을 경쟁력 있는 동북아 해운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담당부서

- 지난해('21년) 사장 직속의 ESG경영실을 신설하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의 특징을 고려해 조직 내 기능부서를 배치하여 3본부 2사업단 25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을 운영 중입니다.
- 부산항만공사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ESG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평가(BSC)와 연계한 실행과제를 설정·운영함으로써 ESG경영이 새로운 업무가 아닌 기존의 업무에 녹아들 수 있게하여, 전사 참여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ESG 경영 활동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SG 및 사회적가치 성과

- 사람과 환경 중심의 그린포트 구축으로 깨끗한 부산항**
- 환경(E)** △업무용차량 전환, 녹색제품 우선구매, 항만조명 LED 교체 등 다방면의 사업을 통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33.7% 감축 성과를 달성, △선박 저유황유 사용구역(ECA), 저속운항해역(VSR) 인센티브 제도, 선박 육상전원 공급설비(AMP) 확대 설치 등을 시행하여 부산항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기준년도(2018년) 1,492ton에서 820ton으로 45% 감축, △친환경 하역장비 전환 등 항만 내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우수 활용'으로 국무총리상 수상 △ESG혁신정책대상(한국정책학회)에서 환

경(E)부문 혁신가치상 수상 △'2022 탄소중립 녹색경영 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받았습니다.

- 항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마중물 역할 수행**
 - 사회(S)** △지역 내 공공기관,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드라이브스루 농수산물 마켓'을 열어 농수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 수익 3천6백만 원으로 지역 결실 우려아동을 지원 △부산항 북항 항만재생사업 추진, △부산·경남지역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어촌의 소상공인과의 협력·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부 장관표창 및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받았습니다.
 - 고객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부산항**
 - 지배구조(G)** △근로자 대표 항만위원회 참관제도 운영,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ESG 소위원회 운영 및 유사 소위원회 통합(사회적 가치 및 친환경안전 소위원회 ESG 경영 소위원회로 통합)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 등 최고 항만에 걸맞도록 끊임없는 경영 혁신과 인권, 공정, 투명경영 등을 통해 신뢰받는 부산항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 이와 같은 활동들로 해운·항만분야 ESG경영 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시대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항만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항만 기업으로 힘찬 항해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1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단지 조성으로 친환경 건설산업 기여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철골구조 활용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설 대비 최대 44%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 등
모듈러 주택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효과 기대

모듈러 주택이란 주택을 구성하는 자재 부품의 70% 이상을 모듈 유닛으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후 조립·설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현장 중심 건축에서 탈피한 공법으로 고질적인 건설업의 문제로 꼽혀왔던 인력난과 자재난 등을 극복하는데 유리하고, 건설산업 전과정의 폐기물과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미래 건설 트렌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모듈러 주택은 전체 주택건설시장의 0.66%인 약 310억 원에 불과한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모듈러 주택을 활성화하고자 LH가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단지 착공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LH가 건설한 모듈러 주택 단지 4곳은 대부분 4층 이하입니다. 레고처럼 사전 제작된 모듈을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 특성상 적층 구조로 일정 높이 이상 올

리는 것이 까다로운 탓입니다. 이번에 모듈러 공법으로 조성되는 세종 행복도시 6-3생활권 UR1·2 통합공공 임대주택은 총 416세대, 7층 이하 주택으로 구성됩니다. 다양한 입면과 충분한 채광을 확보하기 위한 복층 테라스 세대 도입과, 계단식 입면 구성 등 쾌적한 주거성능뿐만 아니라 미관 및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모듈러주택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H는 민간의 자본·기술과 협력하여 모듈러 주택 시장을 확대하려는 계획입니다. 모듈러 주택이 확산되면 다양한 친환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우선 90%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철골구조 활용으로 건축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설 대비 최대 44%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도 있지요.

탈현장 건설방식으로 건설현장의 소음·진동·분진 등의 저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위험성에 따른 안전율과 생산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LH는 경기도와 세종시 등에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탈현장화 사업 프로세스 정비와 기술기준 고도화로 공공발주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LH 관계자는 “전통적인 현장 중심 생산 체계에서 탈피한 OSC(Off-Site Construction) 건축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스마트 건설 기술을 주택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발주 방식도 개편하는 등 새 트렌드에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SG를 담은 모듈러 단지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LH가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주택 단지(세종행복도시) 조감도



지난 9월 19일 열린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착공식

02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2.0 시행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주거지원, 장기 청약저축사업 및 생활안정 프로그램 등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지원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보호아동’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등에서 보호를 받는데요. 이후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호 아동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합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은 매해 약 2,500명에 이르나 시설 퇴소 후 안정된 주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LH는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 제공 등의 단순히 주거 지원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LH의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거비에 1순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는 지난해 자립준비청년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이의 60% 해당하는 1,520호의 주거를 공

급했습니다. 거주기간을 최장 20~30년으로 넉넉히 설정하여 충분히 미래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지요. 갓 성인이 되어 혼자 생활을 꾸리는 데 어려움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 입주 전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했는데요. 아동권리보장원,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협업하여 ‘임대주택 입주 전/입주 후 및 생활위기 시’로 구분하여 생활안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입주 후에도 취업지원, 심리상담, 장학금 지원과 생활 위기 시 관리비, 임대료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주거지원뿐 아니라 장기적인 청약저축사업으로 실질적 주거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매칭펀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립준비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월 2만원, 2년간 총 48만원을 지원합니다. LH와 우리은행이 1:1 매칭으로 재원을 맡고 대한적십자사가 기금을 운영합니다. 납입 지

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저축활동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및 유지 중요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을 직접 서포터즈로 위촉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홍보대사와 함께 시설 퇴소 후 겪은 경험을 살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임대 이자 감면 제도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문 콜센터 설치 및 운영, LH 체험형 인턴 가정 부여 등으로 자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와 자립준비청년들의 따뜻한 동행과 밝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LH에서 주관한 유스타트 간담회 현장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업무협약식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절차

01

골칫덩이 폐유리병 재활용 인공골재로 재탄생!

지속가능한 새로운 재활용산업 발굴로 탄소배출 9,653톤 감축 및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등 약 5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

같은 유리병도 색깔과 모양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백·갈·녹색으로 이루어진 삼색 유리병의 경우 대부분 새 유리병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와인병, 다양한 색상의 양주병,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병, 이동 중 깨진 유리병 등 가지각색의 모양과 색을 가진 유리병들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됩니다. 이러한 혼색 유리병들은 약 15만 톤으로 전체 유리병의 36%를 차지하며 분해되기까지 100만 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은 국내 제병용 원료로 사용이 어려운 혼색 유리병의 출고와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혼색 유리병의 새로운 재활용 방법과 수요처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골칫덩이 유리병을 토목, 건축용 인공골재로 재활용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지요.

재활용 인공골재의 생산과정은 이렇습니다. 배출 및 수거된 다양한 혼색 유리병을 세척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파쇄하여 벽돌이나 블록 등으로 만듭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이러한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혼색 유리병의 재활용을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하여 재활용 실적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재활용 업체에 지급되는 지원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활용 인공골재 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라 제조비용 대비 낮은 판매단가 형성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재활용 인공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했어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혼색 유리병 재활용 인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성을 검증 받아야 했지요. 이물질, 안정성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및 시험성적서 발급으로 유리 인공골재의 안정적 시장진입 기반을 마련하였고,

조사방법·관리방안 마련 등 EPR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아 기본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우수품질 끝에 재활용 사업을 진행한 결과, 2년에 걸쳐 혼색 유리병 28,391톤을 재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 9,653톤을 감축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재활용 지원금 확보 등을 통해 약 5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 내었지요. 무엇보다 매뉴얼 수립으로 유리병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인사혁신처 주관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 또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공단은 폐기물 발생 최소화, 재활용 극대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전환 기반을 구축하는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주세요.



인공골재 생산과정



2022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02

적체된 영농 폐비닐을 친환경 멀칭필름으로!

매년 수거되는 폐비닐 약 20만 톤 영농폐비닐의 재활용을 통해 적체해소 등 농촌 생활환경 개선 탄소저감형 PCR-멀칭필름 전국 보급 확대 실시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은 사회적 문제이자 국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나오는 폐기물량은 그대로 두고, 시설 확충에만 기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생산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중에서 폐비닐은 특히나 골칫거리입니다. 수거 상태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농촌 사회도 이러한 재활용과의 싸움에서 피해질 수 없었습니다. 영농 폐비닐은 재활용 시 고비용 저품질 문제로 재활용 수요가 부족해 매년 수거되는 폐비닐 약 20만 톤(2021년 기준) 정도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영농 폐비닐 재생원료의 국내 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 전라북도청, 농협중앙회, DL케이칼이 손을 잡고 고품질의 영농 순환 경제형 필름 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되

었습니다. 4자 협약의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관련 기술 부재와 실증화의 어려움, 생산한 멀칭필름(밭작물의 생육을 돕고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 덮는 검은색 필름)의 수요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민간 기업이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농민이 농가의 필드 테스트를 실시, 지자체가 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 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자간의 협력을 통해 과제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노력 끝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협업 참여자 모두가 Win-Win하는 재활용 기술개발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멀칭필름 제조업체는 영농폐비닐 PCR(Post Consumer Recycled, 생애주기가 끝난 제품의 재활용) 40% 사용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하였고, 신재PE 대비 저렴한 원료 사용에 따라 원자재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농민을 포함한 사용자는 출고가격 인하에 따른 저렴한 PCR 필름 수급이 가능했고 기존 대비 우수한 품질로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지요. 공단과 지자체의 경우 정부 국정과제(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및 ESG 경영의 이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매립, 소각되었던 영농폐비닐의 재활용을 통해 적체해소 등으로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원료 사용으로 신재대비 약 30%의 탄소저감 효과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협약체는 탄소저감형 PCR-멀칭필름 전국 보급 확대·실시 및 재생원료 함유량 50% 이상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공공사업용(환경정화활동) 봉투, 애완동물 배변 봉투, 소풍봉투 등 영농폐비닐 재생원료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심코 사용하게 되는 비닐 한 장,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이들의 행보를 응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PCR-농업용 멀칭 필름



농촌 영농활동을 위한 시범보급



업사이클링 제품(핸드백, 지갑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무 간담회

1차 실무 간담회 - 2022. 8. 11.(목)

| 박형근 (사회적가치연구원)
Double Bottom Line SK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소개
| 민주희 (한국사회가치평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 방안 및 사례

2차 실무 간담회 - 2022. 11. 4.(금)

| 최진수 (유니비즈 컨설팅)
新정부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ESG 대응



공공기관 SV 측정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ESG 관련 지표, 사례, 경영평가 활용 등 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주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협의회는 Closed membership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기관간 네트워크 차원에서 연 2회 실무간담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SG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간담회는 멤버기관의 선호주제를 사전에 설문하여 공공기관의 ESG와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을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실무 간담회 발표



박형근 사회적가치연구원
Double Bottom Line
SK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소개

SK 멤버사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관리체계 개선, DBL 측정방법론 국제 표준화, SV 측정-온실가스 측정 align

SK 사회적 가치 측정 목적, 측정 방법론, 측정 산식에 대하여

SK는 기업경영활동이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한 “사회 성과”의 총합을 사회적가치로 정의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SK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의 개선점과 긍정적인 부분의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반의 BM(Biz Model)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의 사회적 가치는 크게 4가지 분야(경제간접 기여성과, 환경성과, 사회성과, 거버넌스)로 나뉘고 있으며 SK 멤버사들은 2018년도부터 매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경영활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SK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기구, 재단, 기업 이니셔티브 등에서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화폐적 측정은 사회적가치 국제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Value Balancing Alliance 멤버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화폐화 측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민주희 한국사회가치평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 방안 및 사례

공기업, 공공기관 측정 담당/ESG 부문
측정 업무 총괄(포스코, LH, SH, 우정
사업본부 등 프로젝트 PM)



사회적 가치 화폐화 측정 방법과 프로세스, 그에 따른 활용과 사례에 대하여

공공기관은 이미 공시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화가 잘 되어 있어 일반 기업보다 시장 평균 Baseline 정보 가공 비용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화폐화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외부에 커뮤니케이션하거나, 내부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외부 커뮤니케이션(성과 공유) 활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현 상황에서 핵심 지표는 공통으로 사용하고, 그 외 우리 산업만의 특징 지표를 별도로 활용한다면 작업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측정체계 사례로는 E/S/G에 P(경제성과)로 구분하여 임팩트를 측정한 하나금융 그룹, 서울시민과 주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측정체계를 수립한 SH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특히나 서비스 대상이 국민이기 때문에 대국민에 대해 정책적으로 수행한 사업도 측정 가능합니다. 측정 이후에 측정 결과를 토대로 국민을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데이터의 강점을 활용하여 연례 측정을 해본다면 공공기관의 측정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실무 간담회 발표



최진수 유니비즈 컨설팅
新정부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ESG 대응

ESG 경영전략, 중장기 경영전략, 사업전략, 경영평가 등
관련분야 컨설팅 경력 25년
(대상: KEPCO, LH, KOGAS, K-Water 등)



ESG 정부의 정책방향 리뷰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ESG 대응 방향성에 대하여

ESG 정부의 정책방향 리뷰와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ESG 대응 방향성에 대하여 공유하였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행하면서
ESG를 공공기관 관리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점수가 줄어들고 재무성과 관리
비중이 확대 되었는데 가중치는 줄어들었으나 ESG 담당
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은 민간과 다르게 공공성을 더 확보해야 하므로
Value Chain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해서 ESG
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과 마찬가지로 ESG가 전략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공기관에게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
니다.

ESG가 기업의 핵심적 역할로 자리 잡는다면 전사 중장
기 전략과 ESG 경영전략은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ESG 경영 구현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전략
(S), 조직(O), 자원(R), 공시(D) 측면에서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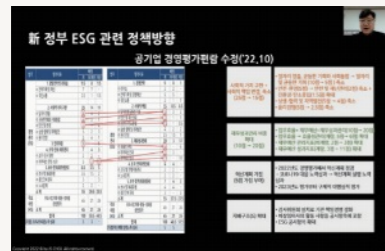
전략(S)의 관점에서는 ESG 수준 진단을 통해 기관의 수
준을 확인해보고, 조직문화로 이를 내재화하기 위해 경
영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조직(O)에서는 공공기관은 아직 사장 직속이 대부분이
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사회 산하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전담조직과 추진단을 운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R)에서 특히 공공기관은 예산이 중요한데, 이는 비
재무적인 영역에서 사례를 찾고 강점을 찾아보아야 하며
내재화 하기 위한 온오프 교육을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공시(D)에서는 공시 항목의 질이 중요하므로 부서 관리
와 모니터링, 전 부서의 참여를 통해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경영은 모든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즉, ESG 담
당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바로 ESG의 전사적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Q&A



Q1

예산에 한계가 있는데, 민간과 협업하면서 **교육 외의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1차적으로는 **자체 모델을 기관에 적용**해보고, **외부의 자문**을 받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배포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차제 협의회로 **토론**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Q2

'**자체 ESG 역량강화**'의 좋은 예시가 있을까요?

이 또한 **자체 수준 진단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전사 구성원의 ESG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벤트**(경진대회, 연말 시상식 등)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사회성과 회폐화가 어려운데, **사회적비용**이나 **지불의사값** 등을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을까요?

사회적가치연구원 개발한 SV Hub 사이트의 SV Library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SVM 4호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성과 회폐화사례**도 게재하여 확산 할 예정입니다.



SV Hub
<https://svhub.co.kr/>



SV Library
<https://svhub.co.kr/svlibrary-info>



사회적 가치 전문가와 함께하는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Q&A의 질문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가치 또는 ESG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소개

- 선우희연 교수(세종대학교 경영학과) | 엄기중 교수(순천대학교 회계학과)
- 오준환 실장(사회적가치연구원) | 박성훈 실장(사회적가치연구원)
- 김민석 소장(지속가능연구소) | 정영일 그룹장(법무법인(유)지평 ESG센터 경영연구그룹)

Q

환경사업이 없는 공공기관(발전사가 아닌 경우)은 환경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나요?

01

A



선우희연

기관의 적극적 공시 및 Scope 2, 3 활동에 중점 두기

환경성과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전략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에 대한 사회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국의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탄소중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기간별로 실행 가능한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경제 주체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의 해결이 인류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중대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 (SA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ISSB) 등이 발간한 공시 기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된 공시의 폭을 넓히고,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및 유해물질 관리, 생물 다양성의 측면에서 기관들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공시기준인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도 이들 국제기구 공시기준과 일관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에 실질적인 지침으로 작용하는 공공기관통합공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 관련, 환경법규 위반, 저공해 자동차 구매, 녹색구매실적 등의 항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시규정들은 환경 관련 노력들이 기관의 핵심 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활동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기관이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문제 및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은 각각 Scope 2,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이라고 정의되어 적극적인 공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ISSB, 2022년 10월 발표). 따라서 핵심 사업이 환경과 다소 멀기 때문에 Scope 1에서 성과가 내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도 이러한 Scope 2, Scope 3와 관련한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환경성과의 향상에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엄기중

환경경영의 원칙과 방향 수립 우선 되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등에서 **환경 분야는 환경정책과 관행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의 원칙과 방향 수립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업(業)의 특성상 직접적인 환경성과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환경경영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경영 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시항목인, 온실가스 감축실적,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저공해 자동차 현황,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의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준환

모든 에너지 사용 원천 점검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화

환경성과는 환경사업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기관이나 조직이던 환경적 영향은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은 에너지 사용입니다. 자체적인 생산이나 업무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따라 이미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발전사 또는 정유사)에서 그만큼의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적 성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실과 같은 일반 업무 시설과 빌딩 등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의외로 큼니다. 서울시 온

실가스 배출의 약 2/3가 건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있고, 상당 양이 상업-공공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최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 사용 원천을 점검하여 자체적인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성 과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구매활동에 있어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한다거나 직원들의 출퇴근 및 이동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환경성과를 창출할 요소가 있습니다.



김민석

다양한 금융 활용 방안으로 환경사업 성과 높이기

ESG 분야 중 환경 영역은 기관이 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화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환경적 책임의 항목으로 원부자재, 에너지, 용수 사용량, 온실가스와 폐기물, 오염물질 배출량, 생태학적 영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발전사 같은 곳은 에너지, 용수, 온실가스와 같은 항목이 매우 중요하지만, 환경사업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항목의 영향이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환경성과의 가중치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ESG 경영의 기본 원칙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즉, 리스크가 있는 항목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다 보니 일부 업종에서는 환경적 성과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금융을 활용한 방법으로, ESG 관련 펀드와 같은 상품을 만들어 환경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조달할 때에도 ESG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유입하여 이를 환경적인 분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발전사처럼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이나 설비 중 교체시기가 도래한 것은 저공해 차량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출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비대면 회의 진행, 서면 자료 최소화 등의 노력도 도움이 됩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직원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 활동 또한 친환경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박 성 훈

장기적 기후위기에 미리 대응하여 ESG 성과 높이기

환경사업이 없는 공공기관이 규모 있는 환경성적을 창출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반면 장기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ESG 성과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치, 혹은 비(非)환경사업

의 가치가 기후 변화로 인해 하락할 위험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관련된 위험성이 존재한다면 그 위험을 재무상태표에 공시하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십시오. 이와 관련한 활동이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입니다.



정 영 일

환경에 부정적 영향 미치는 부분 관리에 초점 맞추기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은 크게 6가지(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폐기물 및 순환경제, 오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자발적/강제적인, ESG/지속가능성 기준에 활용되고 있는 분류체계입니다. ESG/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은 물론, 각종 공시 기준 설정자들은 상기 6가지 분류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과 함께, 기업의 환경성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고, 지역적 위치도 다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으로 인해 미치는 환경 영향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됐든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SG/지속가능성 관리의 첫 번째는 부정적 영향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한 여섯 가지 부분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02



탄소중립을 위해 공공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업의 특성상(서비스업) 임계치에 닿아 일정량 이상 감축이 어려울 경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면 태양열 발전기, 연료전지 설치 이외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다른 기업(특히 공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나요? REC, PPA* 공기업에서 구매하는지 또 이외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 PPA: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 민간기업이 전력구매자인 기업 PPA인 경우 보다 능동적으로 에너지원의 생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환경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음



선 우 희 연

탄소 중립 실행 전담 인력 확보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공공기관 핵심 사업에 따라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에너지 유형 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제한에 근원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감축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목표이므로 기관들은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출발점으로는 기관 내에 탄소 중립 실행을 전담하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력들은 지속적으로 추후되어야 할 목표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일선 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계획의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계획을 세부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이와 같은 전담부서 및 인력의 확보는 미국 행정부에서 실행 중인 Federal Sustainability Plan의 실행지침 중 하나인 'Implementing Instructions for Executive Order 14057'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을 확보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관의 취약부분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사기관의 사례 분석 및 기관 간 의견교환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접점이 생성될 것입니다. 특히, ESG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전략들을 소개받고 개별 기관에 적용하는데 중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공공기관 전체의 탄소중립 전략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엄 기 중

친환경 문화 확산 노력 필요

공공기관은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캠페인 실시, 탄소중립 교육, 탄소포인트제 도입, 한국형 RE100 가입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의 탄소중립 노력을 지

역사회와 협력하여 수행한다면, 녹색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에너지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도입, 대기전력 차단장치와 같은 친환경 설비 도입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준 한

환경가치를 고려하여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행

공공기관의 특성과 사업의 종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전체 Process를 Redesign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경제적 가치(비용절감 및 고객편의)를 중심으로 모든 프로세스와 절차가 기획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환경가치'를 고려한 프로세스 혁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나 직원이 일일이 오가며 문서로 하던 일이 있다면 온라인화를 통해 고객의 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불필요한 종이 사용의 저감 등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석연료 차량으로 하던 일을 전기차나 드론을 활용한다

거나 이동경로(물류)를 시스템화해서 전체 운행거리를 줄인다거나 하는 일들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매우 큰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성적을 내기 위한 방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모든 일들에 환경적 영향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며 혁신이 필요한 곳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REC나 PPA(녹색프리미엄)구매가 가장 전형적인 방법인데, 국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외에 산림조성이나 해외 프로젝트 참여에 따라 인정받는 외부감축사업(CDM)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민석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방법론 적용하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가스 역시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더 이상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각 기관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떤 공정에서 어떤 종류의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하고, 미래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정량적 목표가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는 현재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 감축방법과 간접 감축방법을 적절하게 믹스(mix)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직접 감축방법으로는 대체물질 적용, 대체공정 적용, 공정 개선, 온실가스 재활용, 온실가스 전환, 온실가스 처리의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고, 간접 감축방법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적용, 탄소상쇄(배출권 구매)의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례보다 **중요한 것이 감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법론을 고민하고, 해당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찾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방식(tier1~4)을 현실화, 고도화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Q

기관별 특성과 사업영역이 다른 와중에 해당 기관만이 할 수 있는 S(사회)분야 시그니처 사업을 찾는다면?

- 예) A공사는 국가보안시설 '가급' 시설을 관리하며 일부 지역사회와 단절이 되어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시설과 인접한 지역사회와 업무협약 등 다양한 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외로부터 대표 공헌사업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각기 다른 사업영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그니처 사업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사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S) 분야를 주요 사업과 어떻게 연계시켜야 할까요?



엄기중

기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선행

사회 분야의 사업은 이해관계자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지역사업소, 대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 분야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구성원이 나눔과 공유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내재화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기관의 업(業)의 특수성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순환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공헌에 대해 고민하기

E, S, G 중 S분야는 가장 포괄적인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S분야에서 고려하는 이해관계자는 종업원, 소비자 및 공급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을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기관이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론든 사회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자체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사업 자체가 갖는 사회 공헌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공헌점을 확대 또는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의 존재로 인해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집단의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기업에서 소비자의 만족도 증대와 관련된 활동과도 대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애플, 스타벅스, TED 등의 기업들은 자사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만족을 안겨주며 결과적으로 사회 효용을 높인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둘째, **기관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회구성원 효용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기관이 지역 거주자 고용을 적극 추진한다면, 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부터 획득한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활동을 펼치는 전략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준환

해당 지역 지자체 등과 협력 및 다양한 논의 필요

이러한 내용은 매우 특정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도심과 거리가 먼 원격지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 셔틀사업이나 청각장애인들이 고용하여 택시로 운행하게 하고 이들에게 지자체와 협력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택시 사업자와 연계하는 방식, 그리고 비어있는 시설과 아파트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과 해외 난민 등이 일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말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해당기관 내에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

아 기획과 실행이 어려운 경우 저희 CSES에서 진행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당 지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성시 등에서는 해당 지역 지자체의 지원으로 해당 지역 내의 '사회적기업'들을 선발하고 사회적가치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이 관심 있고 지향하는 'S'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들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관련된 주제가 일종의 '시그니처'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언을 드립니다.



박성훈

리스크 예측과 장기적 대응책 마련 시급

ESG의 본질은 '리스크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관이 책임지고 있는 영역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무엇인지요? 예를 들어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이라면 저출산 고령화, 기술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요양, 돌봄 서비스 산업에 어떤 리스크가 닥칠지 미리 예측하고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

관이라면 신진작가 감소, 순수예술분야 쇠퇴와 같은 리스크에 산업 전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스크 대응은 해당 기관의 존재 이유와도 연결되며 소규모 협력기관-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시그니처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사회공헌 전문 조직 구성과 전략 수립 필요

ESG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S(사회)'와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사회'는 조금 다릅니다. 이에 대한 불분명한 경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ESG 경영을 하기 어렵습니다. ESG의 S, 즉 사회의 우선순위는 지역사회가 아닌 임직원입니다. 나아가서는 공급망이 해당하며,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가 해당합니다. 즉, ESG의 사회를 '커뮤니티'가 아니라 '소셜'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역사회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는 '소셜'임을 생각해 보면 공공기관이 ESG 측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ESG 측면에서 사회공헌은 우선순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외 ESG 공시 및 평가지표 항목을 보시면 사회공헌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나, 있더라도 아주 소수의 항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S'영역은 노동관행, 인권, 직원건강 및 안전, 직원 참여,

고객정보, 제품품질 및 안전, 판매관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역사회 관계' 항목이 있는데, 지역사회 관계는 단순히 지역사회에 사회공헌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조직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정의, 지역 인력 양성, 지역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운영 허가 및 환경적 사회적 영향 평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일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ESG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와 흔히 알고 있는 '사회공헌'의 '사회'와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공기관이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회공헌 관련 전문 조직을 구성하여, 기관의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회공헌 활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業)과 관련된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좋고, 임직원이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영일

지역사회의 환경·사회적 이슈 파악하여 SDG를 달성

공공기관의 경우, 지속적으로 효율성과 함께 공공성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크게 화두가 되었던 '사회적 가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이성이 반영된 사회적 가치가 나름 정의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EU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ESG/지속가능성에 관련된 공시 및 특정 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규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즉, 법률에 의해 기업이 해야 할 구체적인 ESG/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서,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ESG/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관리(실사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적 영향을 완화 또는 없애) 둘째, 환경/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관리(SDG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

해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입니다.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먼저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제일 시급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사회적 이슈들을 SDS에 기반하여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에 기반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입니다. 지역에 기반한 학계, 시민사회 등과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업종 및 동일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하고 있는 여타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도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04



최근 ESG 경영 관련하여 공급망 실사 등 공급망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책은 협력업체의 ESG 역량 강화와 연계되어 협력업체와 ESG 공동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 ESG 경영을 민간분야로 확산하고자 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협력사 등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따라올 수 있을까요?
- 협력업체 지원 실적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기업과의 협업체제 구축 방법이 있을까요?



선우희연

기관이 요구하는 ESG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최근 유럽연합(EU)이 ESG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공급망 ESG 관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U의 ESG 공급망 실사기준 초안은 인권, 환경, 기업 이사회의 의무, 인센티브 항목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분야 수출기업들은 공급자의 위치에서 원청업자가 요구하는 ESG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규모 구매자 입장인 공공기관들은 협력업체에 대한 ESG 관리를 실효성 있는 수준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분야 국내 수출기업들의 ESG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 준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수출기업의 공급망 ESG실사 대응현황과 과제')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공기관 협력업체들 또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으로는

적은 예산, 내부 전문인력 부족, 진단 및 컨설팅 비용 부담 및 관련 정보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의 협력업체 ESG 협업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요 참고사항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EU에서 발표한 공급망 실사 기준 초안을 기초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협력업체와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관이 요구하는 ESG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ESG 전문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 협력업체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민간 대기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증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는 공공기관에 부담이 되는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수반될 것이므로, 협력업체의 규모 또는 성격이 비슷한 기관끼리 공동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엄기중

협력업체와의 다양한 소통창구 개설

공공기관과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는 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공기관은 협력업체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계약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거래문화 확립을 위해 내·외부 감시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업체와 다양한 소

통창구를 개설하고 정례화하여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달성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준 환

법제화 이전, 기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대응 필요성 논의 필요

최근 세계적으로도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입니다. 공급망의 투명한 관리 자체가 ESG의 성과로 평가를 받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초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법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해외 거래를 해야 하는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

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법제화가 조심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가 될 지는 미지수이나 우선은 기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를 딱히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사에 ESG 공시시스템을 지원하고 정보공개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 성 훈

관리와 압력에서 벗어나기

공급망 '실사'라는 표현은 마치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이 잘 하는지 못하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마치 대기업이 투자자나 정부로부터 받는 ESG 압력을 중소 협력사로 전가한다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임 전가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협력사가 ESG관련 측정, 관리기준을 마련할 여력이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이 외부로부터 받는 ESG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협력사가 스스로 ESG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부터 해야 합니다. 즉 대기업에는 실사를 잘 하는 담당자가 필요한게 아니라 컨설팅을 잘하고 ESG 관리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에 앞서 '실사'라는 용어부터 쓰지 마시기를 조언 드립니다.



김 민 석

ESG 경영 완성을 위한 협력업체의 ESG 경영 준수 필수

ESG 경영의 완성은 디테일에서 판가름됩니다. 아무리 경영진의 의지가 확고해도 직원들이 ESG 경영을 수행하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 우리 기관이 ESG 경영을 잘해도 파트너 기관이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역시 ESG 경영의 완성을 위해서는 협력업체의 ESG 경영 준수는 필수입니다. 이때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페널티&인센티브 정책이 도움이 됩니다. 이미 민간 영역에서는 협력사를 선택하는 기준 중 하나가 ESG 경영 여부입니다. 즉 일정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예 거래업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협력업체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년 ESG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망의 ESG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협력업체 등록기준 중, 일정 수준 이상의 ESG score를 취득한 곳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공공기관 및 민간

에서 제시한 여러 ESG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이것을 적절히 사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협력업체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SG 수준 평가는 자기진단과 현장 실사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협력업체에서 배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두 가지가 페널티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협력업체에 ESG 관련 컨설팅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있는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선구매, 물량배분, 가격조정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ESG 분야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사례를 확산, 전파하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기관의 ESG 경영 전략과 연계하여, ESG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협력업체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소개하고 격려하는 활동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영 일

협력기관과 함께 실사의 중요성 인지하기

EU에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효될 예정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서 명시된 실사(Due Diligence) 의무는 구체적으로 인권·환경실사의 정책 마련하고, 실재하거나 잠재적인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방지 또는 완화하고, 실재하는 부정적 영향의 해소 또는 최소화하며, 고충처리 절차의 확립하고, 실사 정책 및 조치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실사 결과를 보고 및 공시하는 총 6가지이다. 실사라는 것은 OECD 책임 있는 기업 행동 실사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행동 규범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기업이 환경/사회에 부정적 영향 관리에 대한 대표적인 관리틀입니다. 자발적 규범(soft law, 연성법)으로 다국적 기업들에게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이, 자발적 규범이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

으로 경성법(Hard law)으로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뿐 아니라, EU 전체가 기업의 의무로 실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사는 2021년에 개정된 GRI Standards 2021에서도 기본 개념 중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중요성 평가 방법론도 실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협력업체와 함께 실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관련 정책 등에 명문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과 함께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파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와 지역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향 관리를 위한 방지/예방/완화방안을 갖추고, 실사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전반적인 실사 체계의 운영과 결과를 외부에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의 예시와 이의 가치를 측정할 방안이 있을까요?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공적 소유권, 독점적 시장구조 등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사회 운영, 자문위원회 운영, 윤리경영 노력, 알리오 공지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의 예시와 이의 가치를 측정할 방안이 있을까요?

05

A



염 기 중

이사회·전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공공기관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이사회 운영 활성화, 전문위원회 운영 강화, 윤리경영 실현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건 사전검토, 만족도 조사, 근로자 참관제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사회 운영에 비상 임의사의 역할을 전문위원회의 활동, ESG 경영과 연계

시킨다면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환경 분야와 다르게 지배구조 분야는 성과의 계량화하는 부분에 다소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활용하던 이사회 개최횟수, 의결안건, 참석률, 제언 발굴, 만족도 조사, 사전검토율 등의 지표에 대한 개선 성과를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우희연

ESG 활동과 정보생성에 관련된 체계적 관리 필요

전통적인 지배구조는 조직의 활동을 위임받은 자의 의사 결정을 위임한 자가 감시할 수 있는 제반 체계로 정의됩니다.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활동을 위임한 자의 범위는 사회 전체 구성원으로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고려하는 ESG 활동과도 공통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 활동 및 정보 생성과 관련된 '일련된 체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인 지배구조로 고려 가능합니다. 마치 회

계정보의 생산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목표수립, 계획실행 및 공시정보생성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최근 green washing 등의 용어로 표현된 '표면적인 ESG 활동'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제안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담 인력(또는 부서)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들은 어떠한 활동 범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활동의 결과는 어떻게 보고되며 평가되는지를 문서화하여 공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준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존중 필요

사실 지배구조는 해당 기업의 구조와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동일하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도 시장형, 준시장형 및 위탁기관 등 종류에 따라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공기관이야말로 국민이 주주일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최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권리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를 단순히 화폐적/정량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해관계자로서의 국민들과의 소통 수준을 다양하게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보소통과 사업의 이해에 대한 정기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외부 이해관계자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훈

ESG 활동에 중대성 이슈 선정·관리 선행돼야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사회 운영, ESG위원회 혹은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정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윤리경영과 각종 공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 차원에서 '중대성 관리'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관

이 모든 이해관계자/사업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공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성 이슈의 선정과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 ESG활동은 자칫 요식행위나 워싱(Washing)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기준과 평가지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시**
- 1 GRI 기준 (2021) 거버넌스 중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중대성 주제 선정 관련 역할(2-14항)'
 - ▶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보고된 중대성 주제 포함 검토 및 보고 책임을 갖는지 여부
 - ▶ 해당 책임이 있을 경우, 정보 검토 및 승인 프로세스 설명
 - ▶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조직의 중대성 주제를 포함하여 보고된 정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책임이 없다면 이에 대한 이유 설명
 - 2 DJSI 거버넌스 평가지표 중 '중대성 이슈'
 - ▶ 중대성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수행 여부
 - ▶ 중대성 이슈에 ESG 주요 주제 포함 여부
 - ▶ 중대성 이슈 파악 및 선정에 있어 이사회, 최고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
 - ▶ 중대성 이슈 선정 후 이해관계자 공개 여부



김민석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실행 체계 구축

거버넌스의 핵심은 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이는 민간조직이나 공공조직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에는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윤리경영을 강조했다면, 공공기관 역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즉 의사결정 체계 및 의사결정된 것을 실행하는 체계를 '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버넌스가 좋다는 것은 기관의 의사결정 방식과 운영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동시에 합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회 운영, 윤리경영 노력, 알리오나 클리아이에 공시하는 것은 거버넌스가 좋은지 확인할 수 있는 일부 항목에 해당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주목적이 무엇이며, 현재 공공기관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

함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ESG 관련 지표 중 거버넌스 항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공공기관마다 고유목적 사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 조직마다 대리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조사하고 개선안을 도출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윤리경영 또는 청렴경영 헌장, 취업규칙, 복무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만 해도 거버넌스 문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정이나 규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이므로, 문서로 된 기준을 만들고, 해당 담당자는 이를 숙지해야 하며, 모든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직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실제로 이러한 것이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영일

평가기관의 평가체계 및 국제표준 차이점 알고 있어야

ESG/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지배구조(Governance)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평가기관이나 국제표준 설정자들이 각기 다른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SG/지속가능성 논의에서 지배구조는 크게 보면 다음 네 가지가 함께, 또는 각각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통적인 지배구조(이는 기업의 소유권 문제뿐 아니라, 주주와 이사회, 그리고 감사의 역할과 구성), 둘째, ESG/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구조(ESG/지속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 그리고 경영진 레벨에서의 ESG/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및 프로세스), 셋째, 기업 행동(윤리경영, 납세 행위), 넷째, 각종 무형자산(이해관계자 관계 관리, 명성 관리, 혁신)입니다. ESG/지속가능성 평가기관들은 주로 첫번째와 세번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별도의 정량/정성 평가 지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와 같은 경우는 TCFD의 첫 번째 권고영역인 '지배구조'가 가장 전형적인 부분입니다. TCFD에서는 이사회와 아울러 경영

진 레벨에서 기후변화 이슈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공개 요구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IFRS에서 작업 중인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EU는 현재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적용이 되는 기업들이 향후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활용하게 될 보고 기준, 즉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상기 지배구조 내용 중에는 주로 두번째, 세번째, 네 번째에 대한 기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재무제표 등 재무적 성과 정보 위주에서는 다루지지 않았던 다양한 ESG 이슈뿐만 아니라, 기업이 갖고 있는 각종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도 지속가능성 보고 내용에 삽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U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형자산은 '이해관계자 관리', '명성 관리', 그리고 '혁신'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과 함께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06

Q

새정부 국정과제 15번에 ‘공공기관 자체 ESG 역량강화 및 민간 협력업체 ESG 경영지원’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공공기관 자체 ESG 역량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 예시가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선우희연

공공기관 인프라 활용한 ESG 활동 관련 내부 교육 실시

자체 역량 강화는 공공기관 전체 수준에서 ESG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미 다양한 분야의 내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그 인프라를 이용하면 교육의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설계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째, ESG 활동에 대한 세부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전담 부서의 전문성은 기관의 활동에 전반적으로 참여하는 일반 인력들의 긴밀한 협조가 있을 때 효과성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ESG 교육은 전담부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부서 교육도 구분해서 함께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관들의 핵심 사업의 성격별

로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 핵심 이슈인 환경문제에 크게 노출된 기관과 비교적 덜 시급한 기관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셋째, ESG 활동, 공시 및 평가 일반에 대한 교육과 실제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의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공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민간 사례도 함께 접하면서 공공 분야에 어떻게 변경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별 ESG 이슈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전문성 있는 강사진과의 활발하게 교류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펼쳐진 ESG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 수준 제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석

리더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 및 전 직원의 역량 강화 추진해야

ESG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ESG에 대한 명확한 인식, 이해관계자 식별 및 참여, 우리조직이 해야하는 ESG 이슈 분석, 우리기관의 ESG 이슈 중 우선순위 도출 및 실행전략 수립, ESG 경영 실행 및 모니터링,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효과성 검증, 추가 개선활동의 8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8단계를 매년 반복해서 진행하면 각 조직의 지속가능성 및 ESG 경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ESG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은 비교적 최근에 요소로 아직까지 조직의 기본적인 업무수행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경영진의 의지가 없으면 조직에 내재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장이 자주 변경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리더가 바뀔

때마다 ESG 관련 정책과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조직의 ESG 경영은 부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리더가 중심이 되어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영진만의 의지만으로는 ESG 경영이 불가능합니다. 실무부서의 전문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ESG 경영이 추진될 수 없으므로, 실무자들은 ESG 관련 전문교육을 받고 역량을 향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실무자 역시 자주 업무 변경 되어 ESG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역량강화를 하더라도 전 직원이 역량강화가 안 된 이상, 업무변경으로 인한 단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에서 ESG 관련 중추적인 역할(backbone)을 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선정하고 최대한 이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 부서의 위상을 높여 타 부서와 협력이 잘 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내용은 전문가(연구자)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무관합니다.

새정부 ESG 정책방향



| 이승원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



“

기업의비재무적요소인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통칭하는 ESG가 경영과 투자에 있어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과거기업들은 고용창출과 이윤극대화만으로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독점·양극화 등 자본주의 폐해가 확산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즉, 기업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투자기관은 장기성장과 수익성 관점에서 ESG를 새로운 경영·투자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Environmenta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 그린빌딩 및 스마트성장
-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 천연자원 및 농업



Social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인권, 성별평등 및 다양성
- 고용 평등 및 다양화
- 지역사회 관계
- 노동기준 및 환경



Governance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 내부고발자 제도
- 경영진 보상
- 기업윤리
- 뇌물 및 반부패

이러한 ESG는 1980년대에 유엔환경계획(UNEP)가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4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발표한 ‘Who cares Wins’ 보고서에서 ESG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글로벌 금융사들이 ESG를 고려해 투자하기로 합의하며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ESG가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UN PRI 6대원칙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 및 투자 의사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우리는 투자 철학 및 운용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 된다.
3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 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금융 산업이 효과적으로 PRI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우리는 PRI 이행 상황과 활동을 보고한다.

이에 정부는 2021년 8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ESG 인프라 확충에 있어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ESG 공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업들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활동·성과 등 ESG 정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는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도록 유인하는 한편, 투자기관들에게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ESG 경영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현재 자산 1조원 이상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2026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ESG 제도



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은 ISSB(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를 설립해 ESG 공시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ESG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적 논의동향과 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ESG 공시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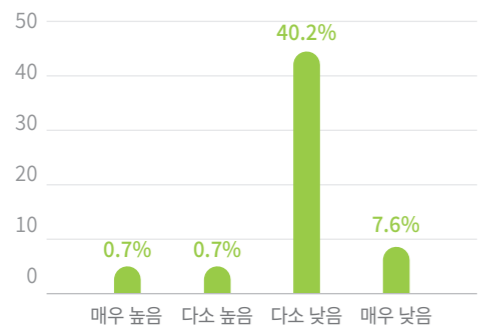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2025년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20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 구조보고서	2022년 자산 1조원 이상 → 2024년 5천억원 이상 →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둘째,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대한상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300개(대기업 84개, 중견기업 81개, 중소기업 135개) 중 응답 기업의 70% 이상이 ESG 경영이 수준이 낮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ESG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는 ESG 경영을 하는데 있어 물적 그리고 인적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게 ESG 경영에 있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중소기업이 ESG 경영에 대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고,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요소를 제공하였다. 최근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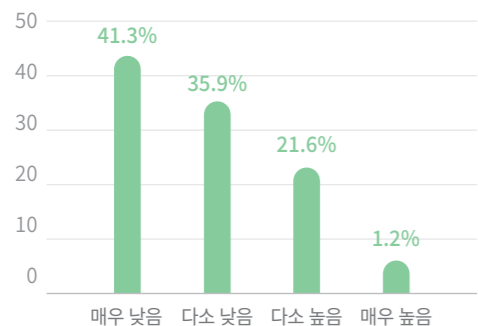
관계에 있거나 수출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공급망 ESG 실사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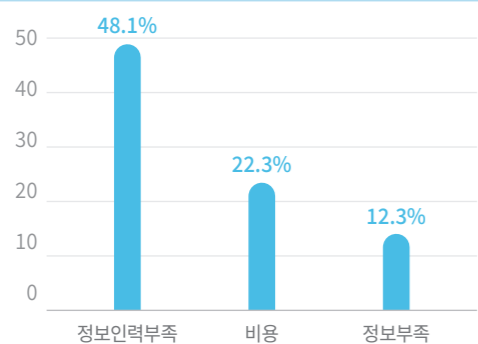
ESG 수준 미흡으로 원청기업으로부터 계약/수주 파기 가능성



ESG 실사 대비 ESG 경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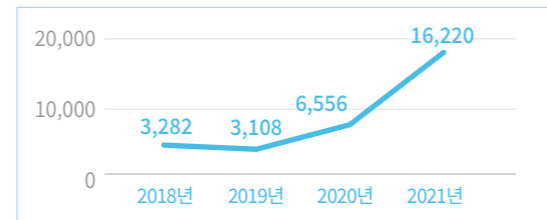


ESG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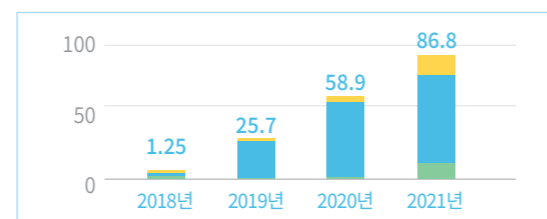
셋째, 정부는 사회책임투자(S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채권을 포함해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책임투자채권이란 발행자금이 친환경 내지 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지칭한다. 발행기관은 자율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채권을 등록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다. 정부는 녹색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 12.)과 녹색분류체계(2021. 12.)를 마련하였고, 최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원전을 포함시켜 녹색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발행기관이 사전에 정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재무적 또는 구조적 특성이 변경될 수 있는 지속가능연계채권을 사회책임투자채권에 편입(2022. 10.)하였고, 사회적채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서스틴 베스트-대신경제연구소 등 평가기관이 국내기업의 ESG를 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ESG 평가시장이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데, 정부는 ESG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 국내 ESG ETF 운용규모(억원)



출처 에프앤가이드

| 국내 ESG 채권발행 규모(조원)



출처 한국거래소



ESG포털 <https://esg.krx.co.kr>

공공기관의 ESG 공시 추가 항목

환경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용수사용량, 환경법규 위반현황, 저공해 자동차 현황
사회	개인정보보호, 인권경영, 동반성장 평가결과
지배구조	자체 감사부서 현황, 청렴도 평가결과

넷째, 정부는 ESG 경영과 투자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 사회책임투자채권, ESG 펀드 등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ESG 투자 플랫폼(2021. 12.)을 구축하였다. 또한, ESG 국내외 동향과 이슈, 범부처 정책과 지원 사업, 자가진단 툴 등을 제공하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이나 산업안전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며, 이용자의 ESG 정보 활용도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 시스템간 연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ESG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연기금 등 공공부문이 ESG 경영과 투자를 선도할 계획이다. 금년에 공공기관의 공시항목으로 에너지 사용량, 인권 경영 등 ESG 관련 10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향후에도 ESG 공시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책임

투자 원칙을 도입하였고,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등 ESG 투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에 있어 ESG 평가항목을 신설하였고, 산업은행의 탄소넷제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의 ESG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를 설립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EU)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ESG 관련 공시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공급망실사 등을 도입해 EU에 수출하는 기업과 EU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등에 ESG 경영 관련 경제적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글로벌 ESG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는 저탄소·공정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ESG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ESG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3 ESG 경영 트렌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권미엽
삼일PwC 파트너

2022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ESG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체감되고, 관련 제도와 규제의 틀이 마련되는 한해였다. 경기 침체로 인한 ESG 무용론 대두, 그린워싱 등의 크고 작은 난관이 있었으나, 전 세계가 약속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매년 각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계획에 대해 합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는 올해 처음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주요 의제로 채택되었다. 탄소는 한번 배출되면 대기중에 200~300년을 머무르는데,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배출된 탄소의 상당 부분은 선진국에서 배출되었고, 그로 인해 현재 기후위기의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들이 얼마나 성숙한 행보를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해,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적 노력들을 기반으로 2023년 ESG 경영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공시 기준 통합에 따른 선제적 준비 필요

지난 3월부터 세계 주요 3대 ESG 공시 제정 기관인 ① IFRS-ISSB, ② 미국의 SEC 그리고 ③ EU의 EFRAG가 각자의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한 공시 기준 초안은 오히려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부담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동등성(Equivalency) 즉, 하나의 공시 체계가 다른 보고 체계의 일부 또는 전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공시 체계에 적용 받는 기업들은 공시의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ISSB기준에 따른 보고가 필요한 회사가 US SEC 등록법인인면서 EU소재 자회사가 있는 경우, 3개의 공시기준 요구 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성(Materiality)’에 대한 공시기준 별 다른 정의, ‘스코프 3’ 배출량 포함 여부 등의 이슈도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남아 있는 가운데, ISSB는 내년 초 ‘중대성’과 ‘스코프 3’ 배출 포함 여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각 공시 기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업들은 각 공시기준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연결 기준’ 데이터 확보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를 공시할 수 있도록 ESG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공급망 ESG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위한 인프라 구축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공시 기준 모두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스코프 1, 2) 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스코프 3) 배출량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EU의 경우 역내 기업 뿐 아니라 Non-EU 기업까지 확대되는 공급망 ESG실사를 진행하고, 문제 발견 시 대응 방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을 2024년

1) SEC 공시 기준에서는 스코프3 배출량이 중요한 기업 또는 스코프3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한 기업에 한해 공시

부터 EU 전체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의무 적용할 것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EU 향 수출기업들은 자사에서 발생한 ESG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이슈들로 인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급망을 아우르는 ESG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국내 기업의 경우 공급망 ESG 관리를 위해 자사의 전략과 목표를 기준으로 공급업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급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며, 기업이 마련한 기준에 통과한 우수업체 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협력업체의 ESG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²⁾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기업의 전 공급망 영역에 있어서 해외를 중심으로 법제화 되고 있는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기업별 대응 전략 마련과 공급망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테크와 순환경제 활성화

전 세계가 약속한 지구온난화 1.5도 이하 제한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와 ‘순환경제’는 국내외에서 이미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³⁾ 기후테크의 경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3,750%의 성장률⁴⁾을 보였고, 글로벌 정치·경제의 혼란이 거듭되었던 2022년에는 투자 시장 전체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3분기까지의 기후테크 분야 투자 규모는 모든 벤처 투자금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재활용 시장 또한 각국 정부 지원, 기업 투자 증가, 소비자 환경 의식 강화로 인해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 규모와 성장성을 모두 고려할 시, 폐가전·폐배터리·폐플라스틱 재활용이 미래 핵심 분야로 평가⁶⁾되고 있다. 기후테크와 순환경제의 글로벌 성장세에 더불어 지난 10월26일 現정부

2) 전국경제인연합회, ‘30대 그룹 공급망 ESG 관리 현황 조사’, 2022. 6. 14.
 3) 국제에너지기구(IEA), 탄소중립 위한 핵심 열쇠 ‘기술 혁신’ 강조, 2021; 삼일PwC, PwC 기후기술 보고서 2021, ‘기후기술은 기후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해결책’, 2021;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실현 위해 순환경제 활성화’, 2022. 10.
 4) 삼일PwC, 기후기술 보고서 2020
 5) PwC, PwC’s State of Climate Tech 2022
 6) 삼일PwC,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대응전략

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을 통해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공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탄소중립을 위한 100대 기술을 선정하여 관련 기술의 R&D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글로벌 성장세와 더불어 국내 관련 정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후테크와 순환경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의 넷제로 목표 달성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다.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에 따른 시장 활성화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구조 상, EU와 미국의 자국 중심·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탄소 무역 장벽은 국내 기업에게 심각한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통해, 미국은 ‘청정경쟁법안(CCA, Clean Competition Act)’을 통해 양국 모두 자국에 유입되는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이 많을 경우 페널티 즉,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연내 최종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EU의 CBAM은 EU집행위(안)을 그대로 따를 시, 2023년부터 3년 간 시범 운영이 될 예정인데 해당 기간 동안 對 EU 수출 기업들은 EU가 정한 품목⁷⁾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품목의 3년 연평균 對EU 수출액은 55.1억달러이며,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⁸⁾의 EU CBAM 인증서 구입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⁹⁾됨과 동시에 간접배출 또한 규제에 포함되어 국내 산업계에 부담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해외 탄소 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소 노력과 배출권 시장 활성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제도의 안정화와 실질적인 효과성을 입증하기 까지 중장기 관점의 시각이 요구되나, 해당 제도의 개편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활성화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 EU의회 강화된 수정안 기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
 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2022.4.1
 9) 전국경제인연합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 2021.7.20

지속가능보고에 나타난 새로운 개념: Double Materiality(이중중요성)



정아름
CSES 팀장



김현정
CSES 선임연구원

최근 ESG 등과 같은
지속가능정보가 중요해지면서,
지속가능보고 측면에서도
중요성의 원칙이 대두되었다.



Double Materiality

이중중요성은 무엇인가?

Double
Materiality



기업 정보의 'Materiality(중요성)'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주 이해관계자는 투자자였다. 그러나 최근 ESG 등과 같은 지속가능정보가 중요해지면서, 지속가능보고 측면에서도 중요성의 원칙이 대두되었다. 기업의 회계, 보고, 공시, 금융, 법률, 리스크 등 시대 및 상황에 따라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Materiality(중요성)는 재무적 이슈에서 지속가능성·비재무적 이슈로 유연하게 확장되었다.

지속가능보고에서 'Materiality(중요성)'는 기존 재무보고에서의 중요성과 같이 보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이다. 이는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지속가능한 요소가 기업의 재무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한다는 점에서 재무보고에서의 중요성과 차이점을 가진다.

지속가능보고에서 Materiality(중요성)는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와 Environmental·Social Materiality(환경·사회적 중요성)가 있다.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는 Single Materiality(단일 중요성)라고도 하며, 외부 영향이 기업 재무 상태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으로 주 이해관계자가 투자자이다. 이에 반해 Environmental·Social Materiality(환경·사회적 중요성)는 Impact Materiality(영향 중요성)로도 불리며, 기업이 경영활동으로 사회 전반(외부)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또한 주 이해관계자는 고객, 소비자,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에 비해 확장된 개념이다.

Double Materiality(이중 중요성)는 EU(유럽연합)의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와 관련하여 발표한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¹⁾,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²⁾, 기업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³⁾과 함께 등장한 개념으로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와 Environmental·Social Materiality(환경·사회적 중요성)를 모두 고려하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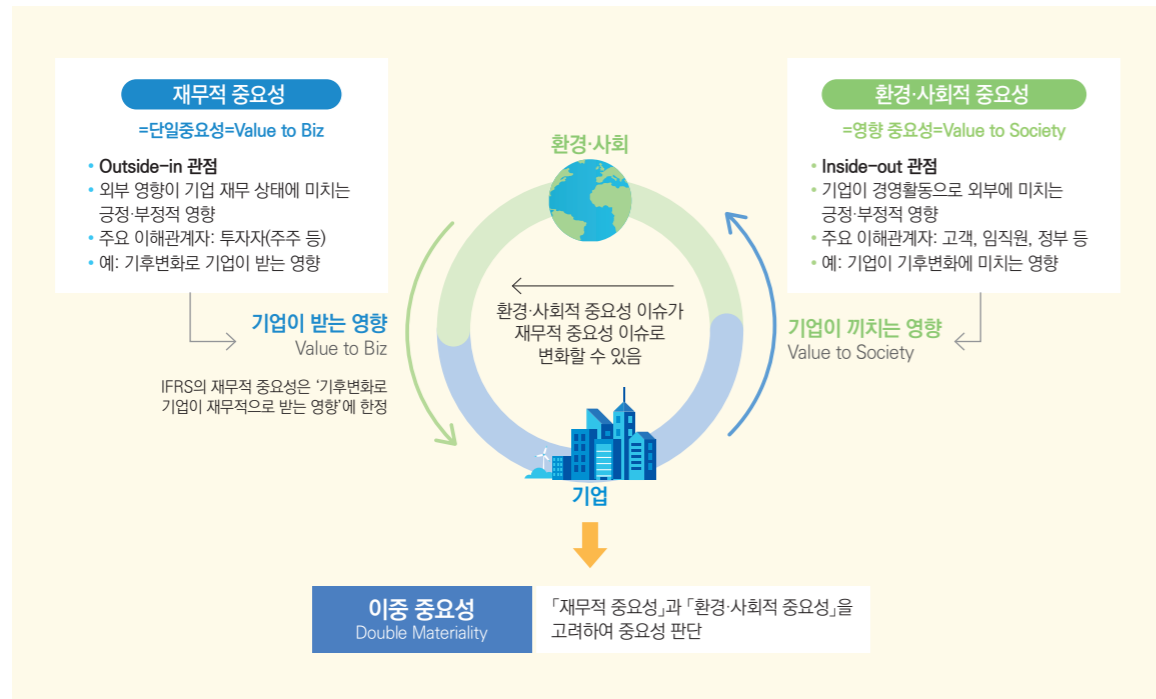
1) Materiality는 국내에서 중대성 또는 중요성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나, 회계 분야에서 처음 논의될 때 중요성 원칙으로 번역되어 보고되었기에 본 글에서는 Materiality를 중요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 유럽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2018년(회계연도 2017년)부터 적용된 전 세계최초의 기업 비재무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으로 환경보호, 사회책임과 종업원 취급, 인권보호, 부패와 뇌물 방지, 이사회의 다양성 총 5가지의 보고요건 범위를 가진. 또한 EU회원국 중 1) 평균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사 2) 자산총액 2000만 유로 이상 3)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함. 다만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 발표 이후 표준화된 공시 기준의 부재, 적용범위의 확장 등의 이유로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의 개정안을 발표함

3) 유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Company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NFRD의 개정안으로 기존 NFRD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대상을 차등 적용함. 이에 대기업, 자회사, 지사, 중소기업 등 모든 유럽 상장 기업들에 적용 및 확대됨. 다만 대기업이지만 NFRD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2026년(회계연도 2025년)부터 적용되고, 상장 중소기업들은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4) 유럽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 2021년 4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생겨난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임. 유럽 회원국의 대기업은 2024년 1월 1일부터 ESRS 및 CSRD를 적용해야함

지속가능보고의 Materiality(중요성)



지속가능보고에서 중요성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

Materi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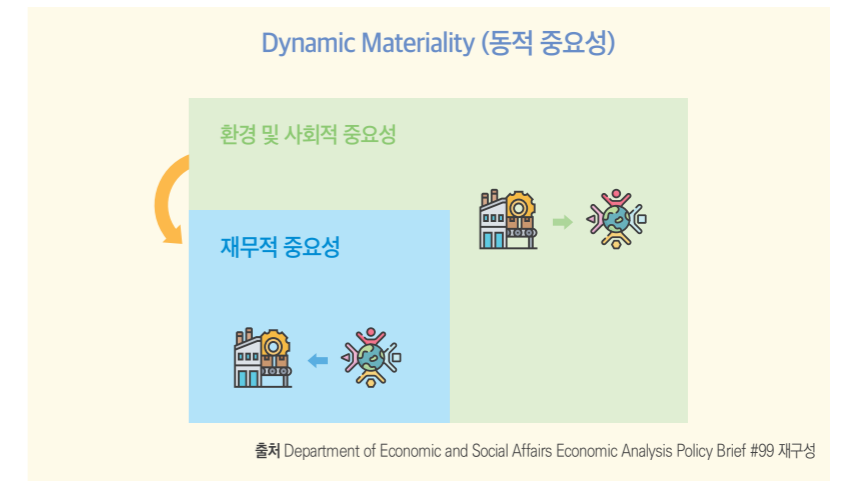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 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제 기구(이니셔티브)마다 지속가능보고에 적용하는 Materiality(중요성)는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와 Double Materiality(이중 중요성)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경우는 Double Materiality(이중 중요성)의 원칙 하에 사회로부터 기업이 받는 영향뿐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나, IFRS (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의 경우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만을 고려한다. IFRS ISSB가 재무적 중요성만이 고려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IFRS는 투자자 중심의 지배구조 특성을 가진다는 점과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유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Financial materiality(재무적 중요성)만을 고려하는 점을 고수하였다.



그렇다면 Double Materiality 관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지속가능보고와 관련하여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새롭게 제시한 개념인 Dynamic Materiality(동적 중요성)는 환경 및 사회적 중요성 topic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무적 중요성 topic으로 중요성 이슈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는 과거 환경 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topic이었으나, 기업 재무성과에 중요한 topic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기후변화'는 단순히 환경 사회적으로 중요한 topic일 뿐 아니라 기업이 재무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topic이 되었다.



66 이렇듯 지금 현재 기업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topic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래에는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Materiality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Double Materiality(이중 중요성) 관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보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99

Materiality



Financial Materi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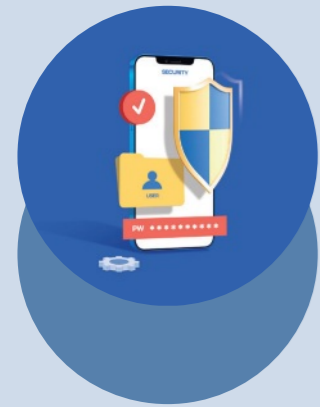


Environmental-Social Materiality



SK텔레콤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을 통한 범죄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 서비스’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찰청 전국 신고번호 및 금융보안원 가로채기 번호에 대한 고객의 전화 연결 시도를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21년 32,271건의 보이스피싱 발신을 차단했으며, 약 74억 원 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SK텔레콤은 ICT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환경/안전/보건/복지/동반성장 등 다양한 ESG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서비스는 고객 접점이 매우 많은 만큼 소셜 임팩트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은 다수의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 서비스 또한 SK텔레콤이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 중 하나이다.

SK텔레콤의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은 경찰에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공유 받아 SK텔레콤 고객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악성 앱들이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의 발신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번호로 연결하는 것을 차단한다. SK텔레콤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하여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번호로 전화를 ‘발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범죄 피해 예방의 가치가 매우 높은 서비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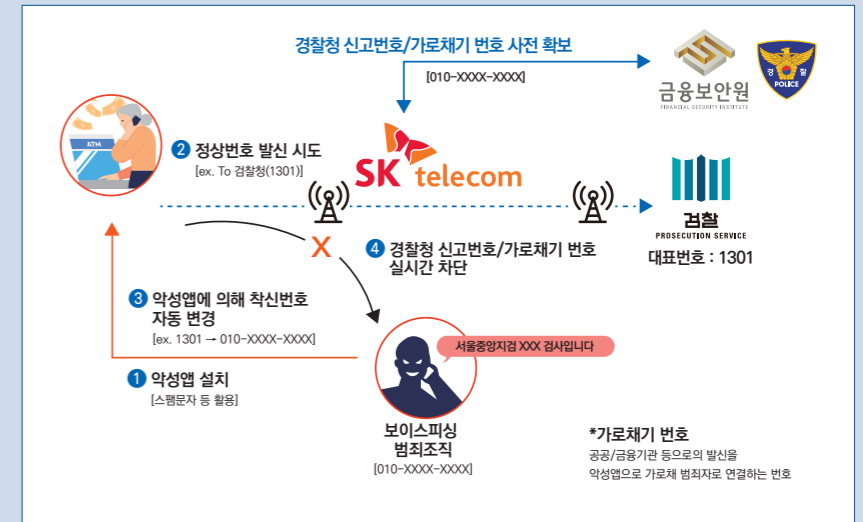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을 통해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은 측정식을 구성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 ①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 건수
- ×
- ②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일 확률 (금융사기 피해 경험률)
- ×
- ③ 보이스피싱 범죄 1건 당 평균 피해 금액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 구조도



측정식은 주로 사업의 직접적인 실적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Input data)과 사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 또는 분석 결과(Proxy)로 구성된다. 모든 Input data 및 Proxy는 출처의 신뢰성과 환경 변화에 따른 업데이트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CSES 내 Social Value 측정센터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는다. 해당 측정식에서 Input data와 proxy 구분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 건수는 Input data에 해당하며, SK텔레콤에서 직접 집계하는 data를 활용한다. 2022년 기준 9만 건 이상의 발신을 차단하였다.
- ②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 차단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줄일 확률은 Proxy에 해당하며,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금융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 중 ‘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비율’을 활용한다. 이는 금융사기에 노출된 사람이 실제 금융사기 피해를 입을 확률이다. 2021년 기준 해당 비율은 3.5%로, 100건의 금융사기 시도 중 3.5건은 실제 사기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스피싱 번호 발신은 금융사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SK텔레콤의 서비스는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100건의 발신 차단은 3.5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③ 보이스피싱 범죄 1건 당 평균 피해 금액은 Proxy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이 2019년에 발표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였다. 해당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1건 당 평균 피해 금액은 65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보이스피싱 유형 중 금융감독원이 집계 가능한 피해금액만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매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경찰청 분석 결과값 기준(2022년 기준 약 2,300만 원)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스마트헌혈앱 '레드커넥트'를 통한 헌혈사업 기여



SK텔레콤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부족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헌혈앱인 레드커넥트를 개발하는데 힘을 모았다. 2021년 한 해 동안 레드커넥트 앱을 통해 101,475명이 사용자가 헌혈에 동참했다. 기술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SK텔레콤의 레드커넥트에 대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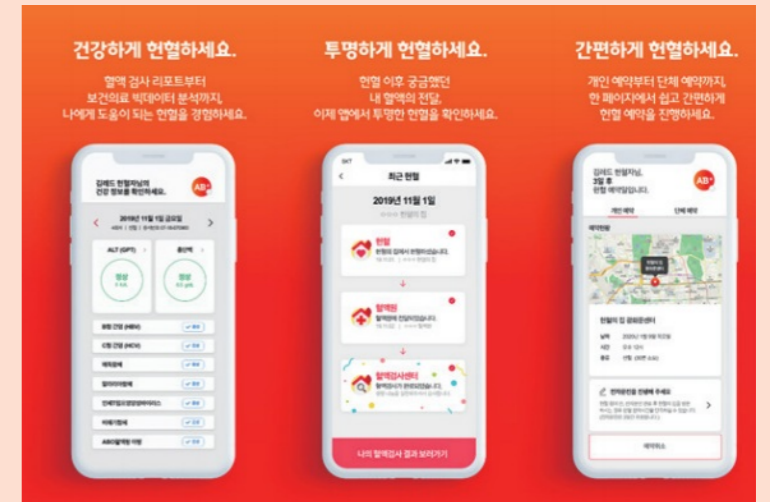
레드커넥트는 SK텔레콤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헌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헌혈 예약 및 건강관리 앱으로, 2019년 11월부터 서비스되고 있다. 레드커넥트는 헌혈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여 '재헌혈'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레드커넥트는 누구나 간편히 헌혈을 예약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며, 혈액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가 헌혈한 혈액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세계 최초로 헌혈자에게 건강정보(간 수치, 총단백 수치 등 11개 항목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출시 3년 만에 앱을 통한 헌혈 횟수 60만 건을 넘기면서 헌혈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레드커넥트 주요 서비스

매년 국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레드커넥트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는 '재헌혈 증가에 따른 국가 헌혈 사업 기여'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산정하기 위해 SK텔레콤은 다음과 같은 측정식을 구성하였다.

재헌혈 증가에 따른 국가 헌혈 사업 기여 성과

$$\begin{aligned}
 & \text{① 레드커넥트를 통한 재 헌혈 증가 횟수} \\
 & (\text{레드커넥트 사용 헌혈자 연 평균 헌혈 횟수} - \text{레드커넥트 미사용 헌혈자 연 평균 헌혈 횟수}) \\
 & \quad \times \\
 & \text{② 레드커넥트 헌혈자 실 인원 수} \\
 & \quad \times \\
 & \text{③ 스마트헌혈 1 건의 가치}
 \end{aligned}$$



레드커넥트 주요 기능

- ① 레드커넥트를 통한 재 헌혈 증가 횟수와 ② 레드커넥트 헌혈자 실 인원수는 Input data에 해당하며,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data를 활용한다. 레드커넥트를 사용하면 편의성과 추가 기능으로 인해 헌혈 접근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레드커넥트 사용자가 미사용자보다 연 평균 헌혈 횟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레드커넥트 사용자와 레드커넥트 미사용자의 연 평균 헌혈 횟수 차이를 레드커넥트의 재헌혈 유도 성과로 보았다. 실제로 현재까지 집계된 레드커넥트 사용자의 연 평균 헌혈 횟수는 2.27회, 레드커넥트 미사용자의 연 평균 헌혈 횟수는 1.92회로 레드커넥트 사용자의 재 헌혈 비율이 약 18.2% 높게 나타났다.
- ③ 스마트헌혈 1건의 가치는 Proxy에 해당하며, 헌혈 가치와 혈액검사 가치의 합으로 산정한다. 헌혈 가치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매년 공개하는 혈액관리본부 사업수입 및 혈액검사 비용을 기반으로 산정하며, 혈액검사 가치는 유사한 구성의 일반 병원 혈액검사비용을 시장가격으로 추정하여 산정한다.

위의 두 사례 외에도 SK텔레콤은 인공지능 스피커 NUGU를 활용한 독거노인 AI 돌봄 서비스, 통신데이터와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등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 SK텔레콤의 ESG 경영 사례 및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이야기는 SK텔레콤 뉴스룸 ESG섹션 (<https://news.sktelecom.com/>)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ESG 경영



• 장윤정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



공공기관에 ESG가 중요한가?

조직 내에서 ESG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외부로부터 “그거 중요해?” “왜 중요해?”라는 질문을 한 번쯤 받게 된다. 이러한 질문의 속내에는 ESG 경영이 정권과 함께 탄생하고 이내 묻혀버린 지난날의 많은 슬로건처럼 금방 지나가버릴 이슈는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장기적 경영 관점의 변화라는 큰 투자를 요구하는 사안이니 만큼, 규모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수익을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는 궁금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경영을 꾸준히 준비하고 실천해 온 기업이나 기관들을 보면 ESG 경영은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될 것이라는 데에 의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름이 CSR이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경영에서 ESG로 바뀌어 왔지만 이는 불분명했던 개념이 구체화되고 포괄가능한 쪽으로 발전한 것이지, 큰 맥락에서의 방향성이 변화한 것은 아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 만으로 공공기관에 있어 ESG 경영의 중요성은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는다. 게다가 국내외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공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의 방어를 위해서 ESG 경영은 매우 중요하다. 시장 투자를 받지 않는 기관에게는 다방면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ESG 관점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러한 모든 평가에서 운 좋게 빗겨나 있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력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ESG경영으로 관점을 변화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조화와 상생을 꾀하기 위해 중요하다. 기후변화는 어느새 피부로 다가왔으며, 근로자나 소비자의 사진 한 장, sns 메시지 한 줄이 기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에 오늘날의 공공기관 경영이 놓여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간 기업에 비해 훨씬 도덕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공공기관에 대어 왔다. 이익을 얼마나 남기고 재무적으로 건전한가 하는 것보다도 임직원들이 얼마나 청렴한가, 얼마나 지역사회 고용에 이바지하고 법규를 잘 준수하는가 같은 문제가 주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온 것로부터 알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공공기관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명시하고 준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자는 ESG 경영은 오히려 공공기관들에게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그게 중요해?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기관에서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을지언정 이미 그것을 실천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다른 기관은 어떤 ESG 경영을 하고 있을까?

기관들의 ESG 경영 선포식 관련 기사를 보면 ESG 위원회를 설립하였다든지, 창립기념일과 같은 사내 공식 석상 자리에서 ESG 경영 체계를 발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단순히 위원회나 경영 체계가 생겼다고 해서 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 ESG 가치를 실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게 된다. 다만 특정 분야의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되었고 예산을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기관 주요사업분야 이외의 시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우며 인력과 조직자원 또한 한정

적이어서, ESG 경영활동도 해당 기관의 주요사업분야에 기반하여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0 하반기~2022년도 1분기 기간 중 공공기관별 ESG경영 추진사례에 대한 학회 발표자료와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공통점을 분석한 결과, 고유사업분야에 연관된 ESG경영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발전공기업의 경우에는 주 사업분야가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발전이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 목적의 발전소 환경설비 성능 개선이나 취약계층에 태양광설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동참하면서 유관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여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관들 간 공통된 활동 내역으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ESG 대상 등의 사례 경진대회 수상, 기부 활동 및 지역사회 봉사 등이 있다. 다만 최근 우려되는 사항은 ‘ESG 대상’ 또는 사례경진대회들을 주최하는 학회나 단체, 언론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운영된다면 단기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에 기여한다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후원을 매개로 한 시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긍정적 취지에서 시작된 대회들이 그린워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당국과 공공기관 모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료: 장윤정(2022),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ESG 경영현황 연구

알리오로 읽는 ESG경영지표

ESG 경영은 사업추진 내용 뿐 아니라 공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과 사회 측면에서 기관의 경영현황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선택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이 대표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으므로 기관운영의 각종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는 중요하다. 또한 국민을 대리하는 관리·감독기관과 여기서 시행하는 경영평가 역시 경영공시라는 창을 활용해 기관 경영을 파악하고 성적표를 확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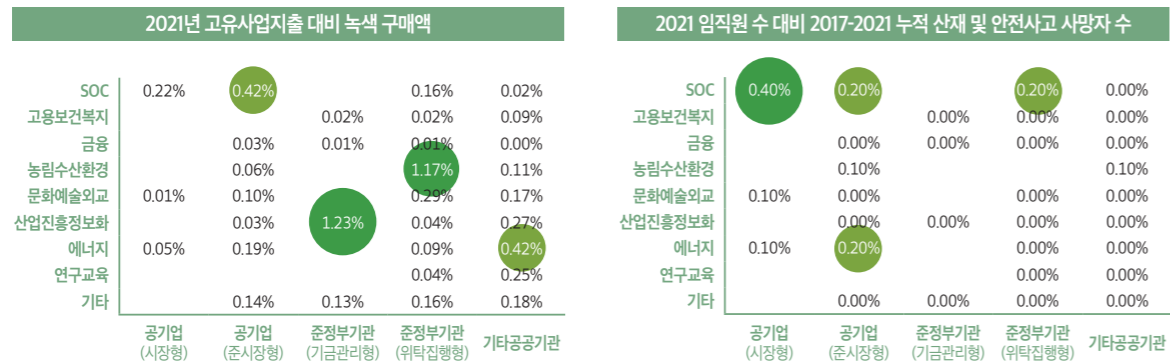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중앙공공기관 대상의 의무공시제도인 공공기관 통합공시 제도에서는 최근 ESG경영 중시 동향을 반영하여, 2021~2022년에 걸쳐 사회 및 환경 항목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 2021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0개 세항목을 추가한 데 이어, 2022년부터는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 세항목을 추가하고, 중분류에 ESG 경영을 신설하였다.

“2021년 이전부터 공시되었던 항목까지 포함한” ESG 관련 통합공시 항목 40여개 중 통계분석이 용이한 6개 항목을 대상으로 2016~2021년도 자료를 알리오 및 유관기관의 최신 보도자료를 통해 수집한 후, 기관 규모별, 산업영역 유형별 평균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주로 에너지·SOC 유형의 공기업 등 대규모 기관들이 주요사업부문과 연관된 항목에서 좋은 실적을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모든 항목에서 모든 기관이 일률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업영역과 기관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향후 ESG 경영 강화의 목표수준을 달리 설정하도록 하는 방향이 보다 효율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아래는 항목별 구체적인 내용이다.

기관 유형별 녹색구매,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 분포

단위: %, 기관당 평균



6개 ESG 항목 공시내용상의 특징

항목	대상기간	대상기관 실적 평균	특징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	2021년	목표 달성률 90%	공기업 및 준정부(기금) 달성률은 약 100%, 산업진흥 정보화영역이 미달성률 높음
녹색구매	2021년	20.3억 원 구매	SOC, 에너지 공기업과 농림수산환경 기관에서 높음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17~2021 5년 누적	0.65명	SOC, 에너지 공기업에서 많음

항목	대상기간	대상기관 실적 평균	특징
기부금액	2021년	8.7억 원 기부	문화예술외교, 기타유형(JDC)에서 높음
개인정보 보호수준	2021년	양호(최우수) 등급 59.4%	SOC, 에너지 공기업은 양호 비율 높으며 연구교육, 기타 공공기관은 낮음
여성 임원 비율	2021년	20%	국책은행 등 금융 기타공공기관에서 낮음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www.alio.go.kr : 최종접속일 2022. 11. 30.)

E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달성 현황을 보면, 2021년 161개 대상기관 중 미달성기관은 16개이며 기타공공기관 중 산업진흥정보화 영역과 농림수산환경 영역이 미달성비율이 높다. 녹색구매액은 기관이 재료와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증받은 녹색제품을 1년간 구매한 실적으로서, 2021년 기관 평균 20.3억원이며 SOC, 에너지공기업과 농림수산환경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관의 고유사업 총지출규모 대비 비중으로 환산해보면, 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 포함된 농림수산환경 준정부기관 유형 기관은 약1.2%를 녹색구매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S 지난 5년 누적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SOC유형 준시장형 공기업과 에너지 유형 시장형 공기업, 농림수산환경 준정부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임직원 수 규모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사업유형 특성

상 공사 등 위험요소가 많은 SOC유형에서 산재 및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이 0.2%~0.4%로 타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사회부문의 또 다른 지표인 기부금액은 2021년 평균 8.7억원이며 강원랜드를 포함하는 문화예술외교 공기업, JDC(제주)를 포함하는 기타 공기업 유형에서 높다. 기관지출규모 대비 기부금액의 비중으로 환산해서 보아도 위 두개 유형 기관만 지출 대비 1%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 여성임원 비중은 기관 내 거버넌스가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로 볼 수 있으며 2017년 평균 11%에서 2021년 20%로 증가하였다. 여성인력 개발이나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기관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금융공기업에서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향후 제도 변화 방향

정부는 12월 말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 및 체계 정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하면서 종전의 ‘안전 및 환경’ 지표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로 분리되었다. 이보다 앞선 8월 발표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서는 ESG 공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항목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ESG위원회 운영현황 및 지속가능보고서 항목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시항목 체계 측면에서는 금년 신설된 ESG 중분류 하위로 보다 많은 기존 항목을 재분류하는 방향이 추진중이다.

향후 2~3년 내에 상장기업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기업 일

부는 자본시장공시제도 내에서 지속가능보고서 의무공시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IPSAS와 IFRS등 국제 회계기준 위원회들도 세계적인 지속가능공시 표준안을 도출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한 논의와 제도화 과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추진체계 및 사업 내용 또한 더욱 내실있게 발전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장윤정(2022) 비재무정보 공개 확산에 따른 공공기관 ESG 경영현황 연구, 분석 22-01, 한국재정정보원
 - (2022) 비재무정보 공시 확산과 공공기관 ESG 경영 현황,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한국재정학회
 - 기획재정부(2022)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보도자료, 2022. 8. 18.
 - (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 보도자료, 2022. 10. 6.
- 알리오(www.alio.go.kr)



SVMR | Social Value Measurement Review

사회적 가치 측정 리뷰



‘사회적가치측정리뷰(Social Value Measurement Review, 이하 SVMR)’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례와 그 결과로 창출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시리즈 보고서입니다. SVMR 4호에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 설립 목적에서부터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정부기조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역할을 모색하는데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CSES X NIA

SVMR 4호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행하고 있는 ①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②전자증명서 서비스 2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각 사업의 환경성과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아래 2개 사업의 주요 환경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행정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사업



행정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기존의 물리서버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존 물리서버들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게 되면 물리서버 1대 당 소비전력이 시간당 400W에서 16W로 감소하며, 전력사용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성과 또한 발생합니다.

- 1 클라우드 서버로의 전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성과 (자원소비 관점)
- 2 클라우드 서버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성과 (환경오염 관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



기존에 종이로 발급되던 증명서를 전자화하게 되면 증명서 발급에 사용되던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종이를 생산하고 인쇄하는데 드는 탄소배출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탄소배출 이외에도 물사용 등으로 인한 여러 환경영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환경 영향도 줄이는 성과가 있습니다.

- 1 전자증명서로의 전환으로 인한 환경오염(탄소배출) 저감성과
- 2 전자증명서로의 전환으로 인한 환경오염(기타 환경영향) 저감성과

CSES 발간자료



추천자료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2022 4월

IMPACT IVM 가이드라인 (2022년 4월)

기업이 창출해내는 임팩트를 사전적으로 추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글로벌 선도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합·사용하는 방법을 준용하였으며, 특히 투자현장에서 현장 실무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6월

알리콘의 공유오피스 서비스 집무실 (2022년 6월)

임팩트 IVM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알리콘 집무실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임팩트)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발간한 2021 Impact IVM Report에서는 알리콘이 창출하는 환경 임팩트를 대상으로 서술하였다면, 본 보고서를 통해 알리콘이 창출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임팩트를 표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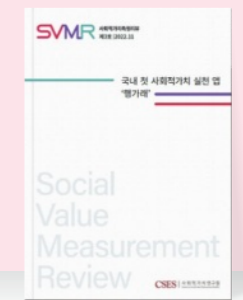
7월

IMPACT IVM 가이드라인 (2022년 7월)

임팩트 IVM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기업 루미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임팩트)를 측정하였습니다. 임팩트 IVM 과정 중 Management 단계에 집중하여, 루미르가 창출한 임팩트를 추적/관리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추천자료 사회적 가치 측정사례가 궁금해요!



2021 7월

SVMR 제1호 한 끼 나눔 온(溫)텍트 프로젝트 (2021년 7월)

SVMR 1호에서는 2021년 초부터 SK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한 끼 나눔 온(溫)텍트'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했습니다.

2022 7월

SVMR 제2호 플라스틱 패키징 감축의 사회적 가치 (2022년 7월)

SVMR 2호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틱 패키징 이슈를 주제로 기업들의 플라스틱 패키징 감축 사례를 살펴보고, 전과정 평가(LCA)측정을 소개하였습니다.

11월

SVMR 제3호 국내 첫 사회적가치 실천 앱 '행가래' (2022년 11월)

SVMR 3호는 국내 첫 사회적 가치 실천 앱인 '행가래'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화폐화성과 기반의 정량적 측정과 인식조사 기반의 정성적 측정 두방식을 통해 '행가래' 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사회적가치측정리뷰(Social Value Measurement Review, SVMR)'는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SES의 시리즈 연구보고서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VMR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측정시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SVMR 시리즈 네번째 편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환경성과 측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로 2023년 1월 발간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사이 2호 70페이지 참고해주세요.

CSES 발간자료

66

사회적 가치와 ESG에 관심있는 공공기관 분들께 추천 드리는 CSES의 발간자료입니다.

99

추천 자료 ESG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2 - 7월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2년 7월)

CSES 시그니처 서베이를 연 1회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 문제 인식조사입니다. 본 보고서는 2020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3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식조사와 함께 미디어 이슈 키워드 100개, OECD 국가 대비 한국 수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SV Hub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8월

사회성과인센티브 매거진 창간호 (2022년 8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 기관의 지난 7년간의 프로젝트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성과 측정과 성장 스토리를 담은 매거진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와 측정 사례, 인터뷰, 사회성과 결과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측정과 보상 매커니즘의 양적, 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이를 기록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10월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Vol.2 (2022년 10월)

CSES는 각 조직·사업이 창출하는 소셜 임팩트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0개 비영리재단*의 임팩트 측정 결과를 담은 Impact Foundation Position Paper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Vol.2」를 발간했습니다.
*참여재단: 미래교실네트워크, 사회적가치연구소, (재)숲과나눔, 아모레퍼시픽재단, 아산나눔재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포스코청암재단, 한국고등교육재단, (사)한국자원봉사문화, 희망친구 기아대책(가나다 순)

2021 - 2월

ESG Handbook Basic (2021년 2월)

ESG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도모하는 '입문서'입니다. ESG 생태계에 대한 이해(글로벌 표준화 기관, 주요 프레임 워크 등)와 ESG 동향 및 전망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ESG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소개합니다. ESG 핸드북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편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www.svhub.co.kr/esghandbook)

2022 - 2월

S in ESG (2022년 2월)

2021년 2월 출판한 <ESG Handbook: Basic>에 이어 <S in ESG>편을 발간하였습니다. ESG 경영 전략을 고민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ESG 중 S(사회)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현 시점에서 S(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 - 1월

G in ESG (2023년 1월 발행예정)

ESG 핸드북 시리즈 세번째 편 <G in ESG>편을 SV Hub 사이트를 통해 발간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의 거버넌스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서적으로 G(거버넌스)의 연대기와 생태계, ESG 관점의 거버넌스 주요 이슈와 관리 포인트 등 실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자료집 이미지 클릭하면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공공 사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이야기